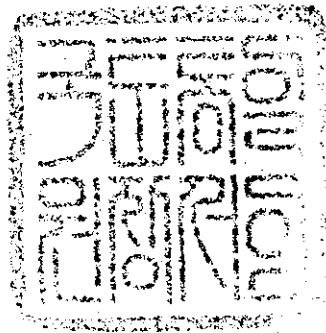


평화통일접근방안(기본구상)에 입각한  
중장기 통한 정책



1971. 12.



# 목 차

|                                |                        |    |
|--------------------------------|------------------------|----|
| 머 리 말                          | _____                  | 5  |
| I. 북피정책의 기본전략과 전술분석            | _____                  | 13 |
| 1. 민주기지 창설부터 북피정권 수립까지         | _____                  | 14 |
|                                | (1945년 ~ 1948년 9월)     |    |
|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부터 6.25 등난까지 | _____                  | 18 |
|                                | (1948년 9월 ~ 1950년 6월)  |    |
| 3. 휴전후 제3차 당대회까지               | _____                  | 23 |
|                                | (1953년 7월 ~ 1956년 4월)  |    |
| 4. 제3차 당대회에서 제4차 당대회까지         | _____                  | 28 |
|                                | (1956년 4월 ~ 1961년 9월)  |    |
| 5. 제4차 당대회에서 4기 8차 중앙 전권회까지    | _____                  | 37 |
|                                | (1961년 9월 ~ 1964년 2월)  |    |
| 6. 제4기 8차 전권회에서 제5차 당대회까지      | _____                  | 45 |
|                                | (1964년 2월 ~ 1970년 11월) |    |
| 7. 제5차 당대회 이후                  | (1970년 11월 ~ ) _____   | 58 |
| II. 대한민국 통한정책의 과거와 현재          | _____                  | 67 |
| 1. 통일의 절대성 강조                  | _____                  | 67 |

~2~

|                        |     |
|------------------------|-----|
| 2. 무력통일의 실패와 그 표준      | 75  |
| 3. 한국통일론의 현실화 경향       | 75  |
| Ⅲ. 국제정세의 변화와 그 전망      | 95  |
| 1.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 95  |
| a) 양극체제에로의 힘의 다원화      | 95  |
| b) 「블락」체제의 붕괴과정        | 97  |
| c) 중립적 위치의 보편화         | 99  |
| d) 국제간 투쟁의 유한성         | 100 |
| e) 국제정치상의 현실주의         | 101 |
| 2. 강대국들의 동향            | 103 |
| a) 미국의 대소, 대중공 및 대일본관계 | 103 |
| b) 일본의 대소 및 대중공관계      | 112 |
| c) 중소관계                | 115 |
| 3.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반도 정세    | 119 |
| Ⅳ. 통일을 위한 국내여건의 조성     | 129 |
| 1. 반공의식의 문제            | 132 |
| 2. 사회정의의 문제            | 136 |
| 3. 통일의 개념문제            | 139 |

V. 결 론

141

공동연구를 위한 대체토론 내용



# 머릿말

극토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설정은 무엇보다 먼저 현실적인 제반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때 한하여 실현가능성을 지니며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파제는 이미 수십년에 걸쳐서 거듭 강조된 이 민족의 숙원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었는가의 여부는 다분히 회의적인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사실상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한반도 통일은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따라서 한국전쟁에 이침없는 지원을 보내 주었던 「유엔」의 권능이나 「유엔」을 좌우할 수 있었던 미국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운명론적인 신념에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한국정부가 일관된 통일방안으로 고수하고 있는 UN 감시하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안도 사실상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방안은 아니었으며 초기에는 상당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가 하연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정면으로 거부된 이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박사의 북진통일론도 비록 독자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말하자면 수단없는 방법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이같은 이박사의 무력통일론은 오히려 북파의 전쟁준비를 가속화시켰으며 우방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호전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휴전선 일대의 전방진지를 미군병력으로 배치하게 하는등 한국군의 현대화에도 지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

요컨대 한국정부는 UN의 권능에만 의존한 나머지 내면적으로는 통일이라는 파업을 민족지상의 절대적인 성업으로 주장하면서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못해 그 실재에 있어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듯한 인상까지 풍겼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양한 변화와 그에 따른 UN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강대국 세력권의 변화 등 급



적한 외적여건의 변화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더이상 안일한 타성에 머물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결코 전쟁에 의해서도 이룰수 없으며 UN감시하의 총선거방안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 스스로가 깨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70년 2월 신태환 통일원장관의 말)

따라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던 박대통령의 8.15선언은 이러한 국제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의 놀라운 실적을 배경으로 한 자신 있는 영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구상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행정적 방안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북파의 「무력도발에 대한 포기선언」과 「UN의 권능을 인정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성의있는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긴장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국제정세와는 달리 계속되는 휴전선 일대의 도발행위와 고조되는 대내적 긴장 요인때문에 이같은 선언이 실현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8~

그러나 통일문제를 논의한 최근의 주장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파견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이 통일달성에 충분한 계기를 줄 수 있는가」라는 선결문제의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회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념체계는 결과적으로 「방법이 없어 못하느냐」 아니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못하느냐」라는 양자택일식의 초조한 결론에 이르기 쉬우며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 모색에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전기했듯이 우리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타적인 타성에 얽매어 독자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통일논의의 적극적인 관심을 「타-부」시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다」는 비판적인 판단으로 일관해온 셈이다.

요컨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성립여부는 이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하에 따라 구현되는 것이다. 방법이 없어 못하는게 아니라 방법을 찾지 않아 못하는 것이요, 여건이 달성되지 않아 못하는게 아니라 여건을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건의 성숙여부에

대해서도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절대적인 신념을 얻겠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요 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의 필연성을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화하려는 긍정적 인 노력을 절대시하려는, 말하자면 필연화하기 위한 작업과정을 적극적으로 「푸쉬」하려는 내면적인 의지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 성 없는 고정관념 때문에 「엔젠카는 기필코 통일외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통일의 가 능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관습처럼 되풀이 하던 기본노선 을 원칙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는 적극적인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 을 찾아야겠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상 우리들이 고수해온 UN감시하의 통환방법은 이미 우 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UN에 의해 거부되고 있으며, 영원한 우방으로 믿고 있었던 미국에 의해서도 점차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보다 절실한 과제로 등장한 이상, 우리들은 이의 실현 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우선 지금까지의 미국일변도적인 대외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시각각으로 침몰하는 국제정세에 신속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종래와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강력한 항의」나 「예외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구절외교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하처럼 구비치는 국제정세는 이미 주어진 필연적인 과정으로 흐르는데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비롯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현실적인 자극요인이 치밀하게 복합되어 전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이해관계나 자극적인 현실여건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없을 때는 강대국의 흥정에 팔려들기 마련이며 항상 피동적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처지로 밀려나게 된다.

일단 일정한 체도로 진입하는 국제조류는 결정적인 제동요인이 제기되기 전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는 국내적인 여건에도 충격을 받는다.

요컨대 우리들은 이미 장구한 기간을 통해 강대국의 일방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거부한다거나 항의하는 행위는 무기력한

하소연에 불과한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포기한다는 것도 자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실감했던 터이다.

「거부」한다거나 「단념」하는 것도 국내적인 여건에 안주하기 위한 일종의 「선택」이라 자위할 수 있으나 가장 비겁한 선택으로 규정되는 것이요 더욱이나 치열한 국제정쟁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는 그림의 상태를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비적성 공산권에 대한 통상포류」의 시도와 같이 다변적인 대외정책을 과감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른바 「탈-이데오르기」 시대라는 역사적인 추세에 보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이데오르기」라는 장벽의 극복문제는 대외적인 정책방향에도 중요한 파궤력이나 대내적인 여건조성에 있어서도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들은 양차대전의 교훈을 통해 「이데오르기」로 인한 극한 대립은 끝끝내 피를 요구하는 비극으로 전개되었음을 누구보다 실감하는 처지여야 한다.

이미 박대통령은 8.15 선언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박대통령의 이같은 평화통일에의 신념은 67년도의 선거유세를 통해 「70년대 후반기에 가서야 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5년이나 앞당겨 제기한 것으로 시기에 적절한 선언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들은 무력에 의한 통일방법이나 UN감시하의 통한방법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자각한 이상 이제부터는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방향을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과 대치하고 있는 북괴집단의 동태와 국제관계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대내적인 여건등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해야 하며, 통일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책을 마련해야 한다.

※ (본연구보고서는 4인의 공동연구로 전체적인 연구의 범위와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대체토론을 사전에 가진 다음, 각분야별로 4등분하여 각연구원은 자기분야에 대해 독자적으로 집필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 I. 북괴 통일정책의 기본전략과 진술분석

전반반도에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북괴의 기본목표이며 투쟁강령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은 오직 혁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는 북한지역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남한지역에서는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괴는 한국의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계급투쟁을 전제로 한 혁명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적화를 예측할 수 있는 통일 이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가 제시하는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본래의 입장에서 출발된 진술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간 북괴가 내 놓은 통일방안은 자주, 민주, 평화라는 세가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그때그때의 정세, 여건의 변화를 참작하여 가장 유리하고 적당한 것을 선택, 제기하고 있는

~A~

것이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피가 제안한 통일방안을 그들의 기본입장인 혁명과 대 UN 관계를 결부시켜 7단계의 시기별로 구분검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주기지 창설로부터 피뢰정권 수립까지

(1945년 ~ 1948년 9월)

### (1) 기본입장

해방후 북한지역에 진주한 쏘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해온 통일정부수립에 관한 정책은 민주기지노선이었다. 즉 쏘련군이 진주하고 있는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민주주의" 혁명파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전한반도에 이를 확장시키자는 노선이었다. 이러한 소위 민주기지노선에 관하여 북피의 역사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 장점으로 인하여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이 조성되었다. 우리 조국에 조성된 복잡한 이 정세는 전 조선적으로 되는 혁명의 동시적 발전이 불가능하였다. 우리 혁명의 장기적이며 간고한 투쟁에서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혁명 역량을 축적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파업의 수행을 보장하는 문제가 필요하



였다. 때문에 김일성 동지는 우리나라 북반부에 소련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민주기지 창설에 대한 과업  
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주기지노선에 근거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소  
련군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민위원회, 5도행정국, 인민회의등  
소위 "인민 민주적 정권"을 조직하는 한편 토지개혁을 비롯한  
산업국유화 등 소위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였다.

1946년말에는 각급 선거를 통하여 소위 "북조선 인민위원회"  
를 조직하였고 1947년과 1948년에 각각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며 1948년 2월에는 혁명의 무장력인  
인민군대를 창설하였다. 1948년 초에는 민주기지노선에 의하  
여 수행된 모든 개혁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키며 앞  
으로 수립될 정부의 기본적인 헌법초안을 작성하여 북한 주민  
들에게 심의, 토의에 부치는 한편 UN결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1948년 8월 25일 그들대로의 선  
거를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괴뢰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통일정부수립문제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수립을 원했으며 그 수행방

~16~

드로서 일부지역(북한)을 먼저 공산화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경 한반도를 공산화시키자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었다.

## (2) 수행방도

주지하느바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전후처리가 토의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즉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임시통일정부를 수립하고 5개년간을  
4개국 신탁통치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남, 북한의 전체주민은 즉시 독립을 주장  
하면서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처음  
에는 반탁을 하다가, 소련의 지시를 받고 즉시 찬탁으로 넘  
어갔다.

이들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 것은 그것이  
소련주장이 많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점과 또 해방후 한국에  
공산당 세력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어서 동 결정을 잘 이용  
만 하면 공산측에게 유리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뿐아니  
라 "인민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타산아래 미소공동위원회 사업  
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공으로 끌고 나가 이른바 전한  
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대상문제를 놓고 결렬되어 결국은 한국문제를 UN 제2차총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공산주의자들은 끝까지 한국문제는 모스크바 결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게 되었다. 소련은 한국문제의 UN상정을 반대하면서 1947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 석상에서 미소 양군의 동시 철퇴와 "외국의 간섭없이" 한국인 자신에 의해 정부조직문제를 해결케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이는 양군의 동시철퇴가 실현만 된다면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타산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 미 북한에서는 민주기지노선의 실천을 강행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압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모스크바 삼상결정에 의한 통일정부수립 대신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의 문제이나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일체의 외국의 간여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한국문제가 UN에 상정된 후 UN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조속히 실시한다는 것이 가결되었으며 그 결정에 따라 UN한국위원단을 조직하여 총선거를 감시키게 되었는데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관은 동위원단의 임무를 거절하였으며 이를 반대하고 동한 총선거에 관한 UN결의안을 모

이고트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민주기지 노선에 연유한 것인데 만약에 총선거를 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시간을 얻어서 북한의 공산기지를 더욱 공고화하여 공산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타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에 따라 남한에서의 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남북협상을 개최하여 선거보이코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시키는 한편 폭동과 파괴를 수시로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5월 10일 UN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자 선거보이코트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고 뒤늦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조작하게 된 것이다.

##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부터 8.25등년까지

(1948년 9월 ~ 1950년 6월)

### (1) 기본입장

1948년 9월 9일에 선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하고 대내외적으로 이를 인정케 하자는 것이 그들의 이 기간동안의 기본입장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소위 8.25선거가 남한에서의 지하선거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북피 중앙선거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대의원 572명 중 남한의 지하선거로서 선출된 대의원이 360명이며 남북한을 통한 투표율이 80%를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만도 유권자의 77.52%가 북피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에 동원되었다고 수자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피의 주장은 북한에 수립된 공산정권이 우리 민족의 의사를 진정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작용시킴으로써 UN감시하에 합법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을 부인하려는데 있었다.

이와 같은 북피의 기본입장은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는 전 조선인민들을 정부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국토의 완전과 통일을 보장하는 양군 등시 철폐에 관한 소련제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다. 공화국 정부는 이미 북조선에서 실시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법령 등 제반개혁을 더욱 공고 발전시킬 것이며 그것을 전 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 조선인민을 이

고 최대의 투쟁과 백방의 대책을 다할 것이다. --- ㅁ

(2) 수행방도

북피는 공산정권의 합법성을 조작하기 위하여 남한에서의 반정부폭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즉 1948년 9월 10일 "북피 최고 인민회의" 제1차 최종회의에서 미쏘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채택 발송했으며 동년 10월 7일에는 외무상 박헌영의 명의로 UN사무총장 및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UN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될시 대표참석을 요구하였으며 49년 2월 9일에는 또다시 북피의 UN가입 요청서를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UN감시하에 합법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복하기 위한 대남공작을 강화하였으며 남한의 공산세력을 무장화하여 각지구에서 유격투쟁을 전개케 하고 이를 적극 물적, 인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시키며 북피를 지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48년 9월, 10월에

있었던 "인공기 계양투쟁"을 벌이게 하여 중앙청 광장에 한 때 "인공기"를 나무끼게한 사실도 있었다.

당시 소련의 원폭보유와 중공의 출현은 북괴에게 매우 고무적인 힘을 주었으며 극동정세가 미묘하게 돌아가자 북괴는 표면상 평화통일공세를 일층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력남침을 서둘러 준비하였다.

당시 1949년 6월 28일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제시된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통일해야 된다.
- ② 미국과 UN한국위원단 즉시 철폐
- ③ 입법기관 선거를 위한 남, 북한 총선거 실시
- ④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거위원회 조직
- ⑤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입법기관은 헌법을 채택하고 정부를 구성하며 현재 남북한의 정부로부터 정권 인수
- ⑥ 남북한의 군대는 새로운 정부가 통합시킨다.

또한 1949년 9월 10일 UN사무총장에게 보낸 항의서에 나타난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의 통일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② 조선의 통일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통일방안을  
실시하여야만이 실현된다.

③ “인공”은 조선인민의 참다운 대표가 참가하지 않고 통  
파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은 일체 무효로 선언한다.

1950년 6월 7일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서는 49년에 제  
시한 상기 통일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계속하여 6월 19일에는 “북파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하여 통일  
을 위해 북파의 “최고 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를 통  
합하여 단일 입법기관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파는 당초의 기본입장은 “인민공화국”만이  
전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하다가 50년대에 들어서  
면서 국제적 고립을 의식하고 북한지역에서만 자체 정권을  
인정받자 남북한 정부 통합론을 내놓게 되었다.



### 3. 휴전후 제3차 당대회까지

(1953년 7월 ~ 1956년 4월)

#### (1) 기본입장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이 수단에 의한 남한적화의 실패를 의미할 뿐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남한 공산화라는 계약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빠른 시일내에 북한을 재건하여 다시금 혁명기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적화라는 종래의 민주주의 로선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휴전직후에 개최된 북괴 당 제6차 전원회의 결정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고 있다.

『-----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얻어질 평화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일본 일조를 아껴가며 북한부에 강력한 성채의 기지를 건설 강화하는 사업에 전체 당원과 전체인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강력한 공산기지의 창설은 조국통일을 일층 더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3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소위 혁명기지 강화에 북한인민들 총동원시켰다.

한편 남한혁명에 대한 성격과 기본임무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전 한반도 공산화에 대한 북파의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었다. 즉 1955년 8월 북파당전원회의에서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혁명의 성격' 이라는 의제 중에 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이라고 규정해 있으며 혁명의 기본임무로서는 『미제와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봉건적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주적 독립달성』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북파의 기본입장은 1954년 11월 중앙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일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 방면으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꾸준히 우리 당의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이 승당 역도를 반대하여 결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북반부 민주기지를 더욱 철옹성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

민주기지의 강화는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민주기지 강화에 대한 구호는 우리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우리의 민주전영이 더욱 강화되고 북반부 민주기지가 더욱  
튼튼해지고 남반부에서 혁명기세가 더욱 고조될 때 우리는  
능히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고

(2) 수행방도

1954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네바에서 한국  
통일문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때에 북괴측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전 조선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기초 위에서 조선의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것
- ② 남·북조선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접근에 대한 긴급한 조  
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국회에 의하  
여 각각 선출된 남·북조선 대표로서 전 조선위원회를 조직  
할 것
- ③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설치하고  
이 중립국감시위원단으로 하여금 총선거를 감시하도록 할 것
- ④ 6개월 기간내에 일제히 조선내의 외국무력이 철거할 것을  
필요로 인정할 것
- ⑤ 극동에서 평화유지에 가장 관심을 가진 해당국들은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여 조선을 단일 독립민주국가로 통일시

결 과된 의 급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조건을 지어줄 필요성을 인정할 것

이러한 제안에 부가하여 6월 15일에는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종래와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다만 『일년내에 남·북조선 내의 군대를 각각 10만으로 감군할 것』을 부가하였다.

제네바회의 이후 북괴는 줄곧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954년 5월 2일에는 제네바회의가 진행중이었는데 북괴 조국건설에서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 월」이 이 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동년 10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1기 8차회의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 ① 통일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평양 혹은 서울에서 1955년 내에 공동회의를 가질 것
- ② 남·북간의 각종교류·통행·서신왕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1955년 2월에 판문점 혹은 개성에서 남·북한 대표자들의 회의를 소집할 것
- ③ 남·북한 제정당 단체 및 각계 각종의 인사들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상호 내왕 접촉할 것.

이와 같은 제의에 이어 1955년 3월 9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제9차회의에서는 외국군대의 즉시 철거, 남·북한 병력의 10만 이하 감축,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계제국의 국제회의 소집, 남·북간의 교류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1955년 8.15 해방 10주년 정국대회에서 김일성지도 되풀이 하였으며 그 중 외군을 철거시키며 남·북한의 무력불행사협정의 체결을 첨가하고 있다.

(3) UN과의 관계

이 기간의 통일방안의 특징은 UN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기피하고 UN밖에서 토의케 하자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제네바회의에서 북괴측이 내놓은 중립국감시위원회 조직이니 또는 관계국들의 국제회의 소집이니 외군철수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김일성 자신이 북괴당 6차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통일문제의 자체해결과 UN에서의 토의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다.

『 정전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앞이 선차적으로 나서

는 과업은 앞으로 열릴 정치회의에서 우리나라문제의 완전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되도록 꾸준히 투쟁하는 것입니다.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미군과 그 추종국가 군대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 자체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4. 제3차 당대회에서 제4차 당대회까지 (1956년 4월 ~ 1961년 9월)

##### (1) 기본입장

1956년 4월에 있었던 북괴 제3차 당대회에서는 "혁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혁명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보아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 단계에 놓여 있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은 장기적이고 차고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북반부의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반부 인민들 특히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통일독립을 이룩하려고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불러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명"의 동력으로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하여 단결된 "북반부 인민들"과 "남반부"의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농민·소자산계급·민족자본가를 들고 있다.

또한 동맹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당규약 제1장 서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문화하여 남한까지의 공산통일의 기본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대학 제1기졸업식에서 김일성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통일시기의 단속문제는 :

첫째, 남한에서의 노동운동의 격화

둘째,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건설 촉진

셋째, 공산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 등을 여하히 촉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라고 강조하였으며 1958년 11월 20일 선동원 강습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기본입장에 뒤흔 북괴의 기본입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우리의 과업이 끝난 것은 아니며 우리에게선 조국통일의 임무가 남아 있고 통일후에는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북반부학

같은 민주화를 실시할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남반부에서 민주화과업을 실행한 후에는 또 북반부와 같이 장차 공산주의에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2) 수행방도 (통일방안)

이 시기에 제시된 통일방안의 특징은 평화적인 통일방법을 취지 않고 연달아 내놓은 평화공세라 할 수 있다.

우선 1956년 4월 3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평화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통일정부는 남북조선인민의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②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한에서 자유로운 정치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 ③ 남·북 인사 상호접촉과 협상의 실현
- ④ 정전의 성과를 공고한 평화의 방향으로 전환
- ⑤ 반·미공동투쟁 전개
- ⑥ 평화유지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정 체결

다음으로 동년 6월 2일 북괴 외상 「남 일」은 첫째, 조선으로부터 둘째,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국가회의 소집 등을 주창



하였고 동년 7월 3일에는 6.25 당시 남한에서 남치해 관  
 정치인들을 가합하여 "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조직하고 평  
 화통일에 관한 선언서를 발표하여 평화통일의 협의체로서 상설  
 위원회 조직을 제안했으며 동년 11월 7일 북괴 최고인민회  
 의 제12차회의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상기한 바와 대동소이  
 한 제안을 한 바 있다.

또한 1차회의에서 김 일성은 그의 보고연설을 통해서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남북의 병력을 각각 10만으로 축소할  
 것을 첨가 제외했으며 종전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

1957년 12월 중앙전원회의에서 김 일성이 제시한 통일방  
 안은 종전 것을 다시 되풀이한 것이었으며 1958년에 들어  
 와서는 북괴의 평화통일공세가 일층 강화하였다.

주 1958년 2월 5일 북한괴뢰정부의 성명은 :

- 첫째, 일체의 외국군대 철퇴
- 둘째, ~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
- 셋째, 남·북간의 교류와 협상촉구
- 넷째, 남·북군대의 최소한의 감축

을 내세웠는데 이 제안의 특징은 중립국감시를 정식으로 제  
 창한 것이며, 북괴군 8만명의 감군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인 것처럼 평화적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또한 중공군 철수를 1958년내로 예측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미군도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라 하겠다.

1958년 9월 8일 북괴 창건 10주년기념보고서에서는 평화통일 방안을 관례적으로 중점 것을 되풀이 하였으며 1959년 10월 20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에서 제시된 통일방안은 상호무력불행사 선언과 종선거에 앞선 경제교류실험을 위한 상설위원회 사전 설치를 참가 주장하고 관계국자들의 국제회의 등은 언급이 없었다.

북괴의 평화통일공세는 4.19 혁명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종전의 방안보다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외국의 간섭 없이 남북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수립에 주로 중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1960년 8.15 경축사에서 행한 김 일성의 연설에서 제기된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북세의 간섭없이 남·북종선거 실시
- ② 남한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한의 연방제 실시
- ③ 상기 ① ② 항이 또 남측이 가지 않는다면 남·북한 실현계

대표로서 구성되는 순수한 경제위원회 조직

- ㉔ 남·북한의 문화시설의 대량
- ㉕ 과학, 예술, 체육의 교류
- ㉖ 미군 철수와 남·북한 군대의 감축
- ㉗ 이상의 제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 등이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회담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에서 주선할 것

이 제안의 특징은 남·북한의 현정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쌍방의 정권대표로서 최고민주위원회를 조직하고 민족의 공동 관심사만을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행동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1960년 11월 11일 U.N. 제15차 총회에 제출한 북괴의 비당록은 상기 김 일성의 통일방안과 같은 내용을 반복했으며

1960년 11월 19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대하여" 라는 보고를 2기 8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였는데 이는 역시 김 일성의 8.15 방안의 반복이었으며 동년 11월 24일 북괴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한 제안을 보면 남·북연방제를 동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U.N 감시하의 통한원칙을 포기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1961년 1월 18일 북괴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성명서에서는 남한에서 일부 정객들이 남·북교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을 기기하며 가까운 시일내에 판문점 등 적당한 장소에서 남·북 대표가 남·북교류문제를 상론하자는 제안을 하여 왔다.

또 1961년 5월 9일에는 평화통일공세를 보다 적극화하기 위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하고 남·북교류를 지지하여 실현에 노력할 것과 남·북연방제 실시 또는 경제위원회조직 등을 촉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 1961년 8.15 해방 10주년 기념식에서 「김 일성」은 통일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외세의 간섭없이 조선인민 자신에 의하여 자유로운 남·북 통선거 실시
- ② 평화적 통일촉진책으로서 우선 협상의 시작
- ③ 누구든 평화통일만 주장하면 정견·신앙·소속의 차이와 과거 여하를 불문하고 같이 손잡고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며
- ④ 남·북교류를 실현하여 북한에 경제력에 의한 남한 경제부흥과 민생문제의 해결

이처럼 1956년 북괴 당 제3차 대회 이후 북괴는 줄곧 평화

통일공세를 취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관계국가의 개재를 주장하다가 4.19를 계기로 이를 배제하고 외세의 간섭없이 자발적인 통일문제 해결을 들고 나섰고 또한 1958년 중공군 철수에 따라 남한에서도 미군이 철수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였고 4.19 혁명에 의한 남한정치정세의 변환에 따라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여 북한정권의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케 하려고 획책하였다.

(3) UN관계

한국통일문제에 있어서의 UN로의 배제를 위한 전술로서 북괴는 중전부터 주장해 온 관계국간의 국제회의와 때로는 중립국감시 등을 들고 나왔으며 4.19 직전부터는 일체의 외세간섭 배제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1956년 4월 북괴 3차 당대회에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해결을 주장하였고 동년 6월 2일 북괴 외상 「남 일」은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관계국가 회의소집을 제창하였으며 1957년 9월 30일 북괴최고인민회의 2기 1차회의에서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성을 위하여 관계 제국가들의 국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1958년 2월 5일 북괴정부 성명은 중립국감시하의 통선거를 주장하였다.

이 때까지만 하여도 외국의 간섭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UN 대신 관계 제국 또는 중립국 등으로 연관을 지어 왔으나 1959년 말경부터는 일체의 외세를 배제하고 통일문제는 남·북한 자신의 문제로서 어디까지나 내부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특히 1961년 4월 17일 제15차 UN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결과와 관련하여 발표된 북괴 의무성 성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① UN 헌장을 북괴는 항상 존중하며 지지하여 왔고
- ② 조선문제 토의에 북괴 대표를 조건부로 참가시키는데 대한 부당한 결의안의 통과에 미국정부가 UN헌장을 위반하고 UN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이며
- ③ UN은 자기 헌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한에서 미군과 기타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④ 조선문제는 조선사람 자신의 손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그들은 UN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UN을 통한 한국통일문제의 토의나 결의는 부당하며 어디까지나 내부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5. 제4차 당대회에서 4기 8차 중앙전권회의까지

(1961년 9월 ~ 1964년 2월)

(1) 기본입장

1961년 9월에 개최된 북괴 당 4차대회에서 김 일성은  
 총결보고 새재 항목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라는  
 제하에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주해방혁  
 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 이라고 남한의 혁  
 명성격을 재확인 하였으며 동 혁명수행의 방안을 제시하여 "남  
 조선인민들이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맑스 레  
 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  
 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정당을 가져야 한다." 고 당 재건  
 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4.19 후의 남한 사태 변화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이 남한내에 공산당 조직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적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정세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반  
 성에서 나온 것인데 김 일성의 말을 다시 빌리면, 혁명정당  
 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노  
 동자·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  
 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 쓰라림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고 하여

당조직의 재건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당조직과 함께 반미투쟁과 미군철수 투쟁 전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토지문제의 해결(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 실시), 중소기업의 발전, 노동자의 8시간 노동제 실시, 남녀평등권, 무료치료제 실시, 등등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동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일전선의 전술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루는 것은 혁명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조아지, 청년학생, 지식인, 그리고 민족자본가까지도 조국의 분열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급들과 계층들의 역량을 튼튼히 묶어 세워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려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남조선인민들은 공동의 원수를 물리치고 해방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조국의 통일과 위협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1955년 4월 중앙전위원회와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규정한 혁명의 성격을 다시금 되풀이 하였으며 오직 혁명을 통해서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남한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실현한다는 본래의 계획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혁명을 조직하고 영도할 수 있는 공산당 지하조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당조직은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모든 군중을 투쟁으로 조직 동원시켜야 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62년 10월 23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도 김 일성은 다음과 같이 혁명의 기본 입장을 재강조하고 있다.

『 .....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온 민

쪽이 크게 뚫쳐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2) 수행방도 (통일방안)

북괴 당 4차대회 (1961년 9월)에서 제시된 통일방안  
을 보면 :

- ① 미군을 철수시키고 외세간섭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  
에서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
- ② 남한에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보장
- ③ 총선거 전에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의 자  
유로운 정치활동 전개
- ④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선거 실시
- ⑤ 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서기만 하면 계급적 처지, 사회  
적 지위, 정견, 신앙의 여하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다.

로 되어 있고 1962년 10월 23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놓고 있다.

- ① 반미구국통일전선강화
- ② 남북연방제 실시와 최고민족위원회의 구성
- ③ 남·북조선의 무력불행사협정의 체결과 병력의 각각  
10만 이내로의 감축

또, 1963년 12월 10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연석회의

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 ① 남·북간 불가침조약체결과 감군조치
- ② 서신거래, 전신, 전화, 통신연결, 우편물교환
- ③ 기자, 언론인 내왕실현, 예술단, 체육단교류, 학술연구,  
관광을 위한 인사 내왕
- ④ 경제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상설  
위원회의 설치

② 편문점 기타 지역에서 남·북 대표들이 당면문제를 공동협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실현시킬 것

이상은 1960년 8월 15일에 제시한 내용과 유사한 제안임을 알 수 있는데 5.16 혁명 이후, 민정이양을 앞두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된 시기를 이용하여 제시된 것이다.

위의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은 1962년 12월 북괴당 4기 5차 중앙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책을 결정하고 전쟁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한 때에 제시된 것으로서 북괴 내부에 대한 비평화정책과 대외적인 평화정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U·S 관계

1961년 12월 19일 제 16차 U·S총회의 조건부 초청안에 대한 북괴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북괴 위두성 성명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① 북괴는 UN헌장을 존중하고 인정하여 왔다.
- ② 전후 처리문제의 하나인 한국문제는 결코 UN에서 토의할 문제가 아니다.
- ③ 미국정부가 한국문제를 UN에서 해마다 비법적 토의를 진행케 한 것은 조선을 침략하고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범죄적 행위를 UN의 깃발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조선에서의 평화적 통일은 미군을 남한에서 철퇴시키고 조선사람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 ⑤ UN총회가 북조선의 참가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선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한다면 그 어떤 결의안을 채택해도 이를 인정치 않을 것이며 무효로 할 것이다.

또한 UN 제18차 총회에 대한 1963년 9월 23일

북괴 외무성 성명에서는 :

- ① 조선문제는 내부문제로서 외부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

- ② UN은 조선문제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 ③ UN이 헌장대로 사명을 수행한다면 UNCURK를 해체하고 남한으로부터 미군철수를 선행시켜야 한다.
- ④ 일단 UN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는 이상 용당 문제의 당사자인 북의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고 주장하여 UN총회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년 11월 23일과 12월 15일 양자에 걸쳐 북괴 대표의 UN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북괴는 한국문제의 토의를 UN에서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UN의 헌장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고 UN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는 이상에는 무조건 북괴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는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UN관계에 있어서 통일문제만큼은 UN에서 간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중래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6. 4기 8차 중앙전원회의에서 제5차 당대회까지 (1964년 2월 ~ 1970년 11월)

(1) 기본입장

1964년 2월 27일 북괴 4기 8차 중앙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정세와 조국통일"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동회기를 계기로 '남조선 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로선이 설정되었다. 즉 통일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남조선 혁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남조선 혁명"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은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였는데 그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인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대목에서 ;

“남조선 혁명은 아직도 외래 제국주의의 연속하여 있는 우리 나라 영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우리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 혁명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라고 말함으로써 2가지의 상이한 혁명 단계와 혁명 과업을 명백

히 구분하였다.

이러한 '남조선 혁명' 문제에 대해서는 그후 1965년 10월 10일 북괴당 창건 제20주년 기념보고와 1966년 10월 5일 북괴 노동당 대표자 대회에서의 김 일성의 보고와 또한 1967년 12월 16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4기 1차회의에서의 김 일성의 집강 중 둘째 부분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는때 이렇게 주장되어온 남조선 혁명의 내용을 몇 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조선 혁명"의 지위문제에 있어서는 "조국통일" 문제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어 있으면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북괴가 말하는 "조국통일"은 "남조선 혁명"을 전제로 하는 조국통일이라는 점, 또한 북괴기치하에서 통일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 혁명"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복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가분의적인 관련이 있으나 각기 해결하는 사업과 전술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구분 | 조 주 등 인                  | 남 조 인 권 명                          |
| 과  | (주조·민주의 권상회부)<br>민주적 태 방 | (서사회회부 수급)<br>계 급 태 방              |
| 업  | 남 북 권 인                  | 남 북 권 인                            |
| 구  | 남 북 권 인                  | 남 북 권 인                            |
| 주요 | 남 북 권 인                  | 남 북 권 인                            |
| 수  | 평 화 적 방 법 이 가 능          | 평 화 적 방 법 이 가 능<br>평 화 적 방 법 이 가 능 |

둘째, '남조선 혁명'의 성격에 대해서는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행한 김 일성의 연설에서 "..... 이리하여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외래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즉 "반제·반봉건 민주주의의 혁명"이며 본질상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남조선 혁명"의 주인공은 "남조선 인민"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남한혁명에서 결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남한인민이기 때문에 혁명을 책임지고 수령할 수 있다는 것과 남한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결성적인 투쟁을 벌여야만 이를 성취할 수 있는데 이는 남한의 사정을 잘 아는 남한인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7년 12월 북괴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와 같이 북괴의 지원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에게는 남조선 인민들의 앞방으로 있는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투쟁을 적극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실천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 북반부 인민들은 남녘의 침재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해방해야 하겠다는 혁명적 각오를 가져야 하며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결성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명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력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력군 편성문제는 1946년 10월 북괴 당대토자 회의에서의 김 일성 보고 중 「혁명역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 계층인 노동자·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것」 이라고 제시한 바 있었다. 김 일성이 제시한 주력군에 대한 개념은 "남조선 혁명"에서 동원될 수 있는 남한 사회의 기본 계급 다시 말해서 노동자 농민과 그들속에 뿌리박고 있는 혈연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주력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조직하고 그 당 주위에 노동자·농민을 결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는 혁명을 지도하는 맑스·레닌주의적 당조직이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산당조직은 무엇보다도 선차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통일전선조직을 들고 있다. 통일전선에 대해서는 1966년 10월 당대표자 회의에서 김 일성이 「오늘 남조선에서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앙라하는 광범위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혁명의 주력군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광범위한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 세워야만 반혁명세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적"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 수 있는 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즉 일반군중(노동자·농민을 제외한)은 그 목적은 될 수 없으나 노동자·농민과 힘을 합할 때에는 중요한 보조적 역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급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자면 반드시 혁명에서 영도계급으로 되어야 하며 모든 혁명역량을 주위에 집결시켜 투쟁하여야 하며 이는 노동계급과 전외당(공산당)이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로 보고 있다.
- ③ 주력군을 편성하고 통일전선을 조직하는 등으로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남조선 혁명 주행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조선 노동당 4기 2차 중앙전원회의" 결론에서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반혁명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하여야 한다」라고 김 일성은 말한 바 있다.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남한의 삼파적인 반공제지확립과 국력의 강화가 이루어진 데서 기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반혁명세력을 약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군사 모든 면의 약체화를 의미하며 특히 국군내의 갈등조성 등으로 와해공작을 강화할 것을 뜻하고 있다.

다섯째, "남조선 혁명"의 기본방침과 남면 투쟁과업으로서는 1966년 10월 대표자 대회에서 「현 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역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키므로써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마지막에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라고 못 박고 있으며 투쟁과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바, 첫째로는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 둘째로는 "팻쇼 폭압정

책"을 반대하는 투쟁과업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투쟁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투쟁은 반드시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서 전개되어야 한다. 투쟁전술에 대해서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의 배합을 하되 이러한 투쟁은 반드시 정권탈취투쟁과 결부되어야 하며 폭력에 의거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투쟁 방법에 대해서 북괴 창건 20주년 보도에서는 「그 투쟁형태가 어떠한 간에 그 것은 모든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의 준비로 되어야 하며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괴는 이상과 같이 남한혁명논을 제시하면서 통일은 반드시 남한에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힘을 합하여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북괴의 기본 입장이다. 북괴는 이러한 기본입장으로 부터 출발하여 통일혁명당과 같은 공산당 지하조직을 남한에 부식하기 위한 대남공작을 강화는 한편 283 부대 124 부대와 같은 무장특공대를 조직-남파시켜 그들이 무적하는 "남조선 혁명"의 수행을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시켰다.

(2) 수행방도 (통일방안)

1964년 12월 14일 복귀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성명  
에서는 :

- ① 통일문제는 11에서 다룰 수 있다.
- ② 통일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실현되  
어야 한다.
- ③ 미군의 철수와 외세간섭의 배제
- ④ 남북한 접촉과 협상실천

을 주장하고 있으며 1965년 7월 3일 「재미 조선문제 연  
주소」 소장 김 응중에게 보낸 통일방안은 :

- ① 조선인 자신에 의하여 통일하여야 한다.
- ② 외국군대 철수 통·일반·평등·직접적 원칙의 비밀투표로서  
통선거 실시
- ③ 남북한 대표로서 통일적인 상설기관 설치
- ④ 남북간의 경제문화 교류
- ⑤ 외국과의 군사조약 폐기

등인데 김 응중에게는 1967년 1월 4일 재차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이 때에는 상기 (1차째) 통일방안 외에 남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면 통일문  
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① 미군의 철거
- ② 파월축군의 철수
- ③ 한·일협정 폐기
- ④ 정치범 석방
- ⑤ 민주주의적 자유보장

이러한 조항들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현 대한민국 정부와는 통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1967년 12월 16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4기 1차회의」에서 발표된 정강에서 통일문제에 의사의 관철없이 자기존으로 하여야 하며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1968년 9월 7일 북괴 장전 20주년 보고에서 「조국 통일은 이제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 정권을 대체 부순 다음이야 비로서 이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통일에 있어서 미군철수를 선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970년 6월 3일 미국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통일전선 위원장」 고병철에게 보낸 통일방안에서는 앞서 김응중에게 보낸 방안과 유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미군철수와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 및 병력감축
- ② 남북통선거를 통한 중앙정부 수립
- ③ 통일에 앞서 연방제 실시



- ④ 남북 각종 교류 실현
- ⑤ 남북간의 편지거래와 인사예왕 실현
- ⑥ 이러한 협의차 남북협상실시

북괴는 이 제안에서도 남한의 현실권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통일방안은 북괴가 남조선 혁명론을 주장하면서 부터 된 정권과는 동일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대상이 못되며 때문에 특역적인 방법으로 현실권을 전복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그 정권과 이상 제시한 각종 통일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통일방안 제시와 함께 특징적인 것은 각종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공세적인 제안 제시라 할 수 있다. 즉 1965년 2월 10일에 "경평대항 비상경기 대회" 개최 제의, 동년 3월 14일에 "남북공동 영화제작 및 연극공연 대회" 개최 제의, 동년 7월 14일 "남북간의 과학문화교류" 동년 8월 7일 "남북간 서신교류" 동 8월 8일 "경평수업경기대회" 개최를 제의한 바 있고 1966년 에는 1월 15일 "남북간 자유왕래" 5월 18일 "영화공동제작" "남북친선 축구경기" 개최, 5월 21일 "남북간 기자교류" 5월 23일 "남북 과학자교류", 6월 4일 "남북 축구경기" 개최, 6월 15일

"남북간 서신거래실현" 6월 22일 "남북공동예술축전" 개최. 8월 3일 "남부학생 관광교류 실현", 8월 20일 "공동미술전람회" 개최. 9월 21일 "태상공동연구" 등등을 제외하여 왔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북괴가 유리한 부분만 택해서 제안한 것이며 이 당시 그들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던 시기인 만큼 이러한 제안을 통해 그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연락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3) UN 관계

1965년 8월 26일 북괴외무성 성명은 UN 철수와 UN CURK 해체문제를 UN에서 논의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동년 9월 24일에는 UN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부담하며 UN은 교전 일방으로서 한국문제에 관여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65년 11월 23일에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고 1966년 7월 21일 북괴의 비망록에서도 한국문제는 UN 밖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관계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UN에 대한 종전의 태도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북괴의 UN에 대한 태도는 그후도 계속 유지되었

으며 1967년 8월 21일 북괴성명과 1968년 11월 25일 UN 총회 제23차 회의에 제출한 북괴 의무성 비망록에서도 미군 철수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UNCURK 해체를 주장하였다. 1969년 10월 UN 총회 24차 회의에 보낸 북괴 비망록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주장 이외에 관제국의 국제회의 소집을 재촉하면서 UN에 북괴가 무조건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70년 8월 30일 북괴 의무성 성명은 UNCURR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북괴가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남북한 인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북괴는 UN 헌장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북괴는 만약 UN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지 행동하려면 UN 총회에서 조선문제의 토의가 진행될 때는 무조건 북괴를 참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다시 말하면 북괴는 한국문제 토의를 증정과 같이 UN에서 배제하기 위한 태도를 지동 유지하여 왔으며 그러기 위하여 한 때 잠잠했던 관제국가 회의를 주장하는가 하면 UN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될 때는 반드시 북괴를 참가시켜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7. 5차 당대회 이후 (1970년 11월 ~ )

㉑ 기본 입장

1970년 11월에 개최된 북괴 당제5차대회에서 밝힌 북괴의 기본 입장은 '남조선 혁명' 노선이다. 남조선 혁명으로 선의 기본 목적은 종전과 다름없이 월정부의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데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와 그 주구들의 팽소적 독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명적력을 강화하여야 하는바 혁명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군 편성, 통일전선 형성과 각종투쟁전개를 들고있다. 주력군 편성에서는 박스, 레닌 주의적 당을 우선적으로 조직 강화하고 그 주위에 노동자, 농민을 집결시켜 모든 곳에서 당역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대중 속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일전선 형성에 관하여서는 각계각층을 정치적 역량으로 조직하고 '반미주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종 투쟁의 전개

에 관하여서는 집권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온갖 형태의 투쟁방법을 올바르게 결합하여 혁명군등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한인민들이 주동이 되어 행하여야 한다는 소위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북에서는 대신할 수 없다"는 종래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북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이러한 남한혁명론은 1964년부터 주장해 온 노선인 바 원재에도 이러한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

(2) 수행방도 (통일방안)

197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5차당대회에서 제시된 통일방안을 보면 종전의 당대회에서 제시된 것과는 약간 심질을 달리하여 우선 "남조선에서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집권에 들어 갔다 이군철거를 주장하고 집권법을 식방하여 민주주의적 자유가 보장될 때 언제 어디서든지 평화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본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미군을 철퇴시키고 상호 10만 또는 그 이하로 감군조치를 취하며 그후 "평화적 민주적" 방법이 의하여 남

북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압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남북인민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연방제의 실시도 가학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1971년 2월 북괴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제안된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

둘째, 미군의 철수후 남북이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상호 감군.

셋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일조약 등 각종 조약과 협정의 폐기 및 무효화

넷째,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기조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다섯째, 남북총선거를 위한 남북 각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보장과 남한에 "감금되어 있는" 정치범들의 무조건 석방

여섯째,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조선 연방제 실시

일곱째, 남북간의 동상과 경제적 협조,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각분야의 상호교류와 협조의 실현과 서신 및 인사 왕래의

실시

여덟째,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정당사회단체들과  
대표자들의 정치협상회의의 진행  
등을 들고 이러한 조건이라면 진정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통일방안은 결국 증편식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 것  
이며 다른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면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  
으로서 남한정부에 '양심직이고', '민주적' 인사가 들어 있어야  
하며 '민주적' 인 본키기를 위하여 정치범의 석방등을 주장  
한 점 등이라 할 수 있겠다.

(5) UN 관계

제 26 차 UN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적인 활동으  
로서 한국문제 토의를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북괴의 태 UN  
공격은 공식적으로는 없었으나 중공의 UN 가입으로 발미암아  
중공대표의 발언을 통해 북괴의 입장을 대변하였는 바. 남조선  
측은 북괴가 주장하는 8개항을 지지한다고 함으로서 UN  
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배제 원칙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8. 전 망

(1) 기본입장

5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북괴의 기본입장은 "남조선 혁명"이며 이는 이미 종전부터 주장되어온 바이다. 그러나 이 노선은 앞으로 북괴의 대한인민국 적화통일을 위한 기본노선으로 계속 권치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혁명노선 관철에서 요구되는 혁명주력군의 편성, "반미 반일 구국투쟁전선"의 형성, "반혁명세력"의 약화등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인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계속 고수하면서 반면에 언제든지 북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보낼 수 있는 태세확립을 갖추도록 계속 긴장감을 해소시켜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조선-혁명"은 각종 투쟁을 통하여서만이 결국은 정권쟁취에 가지 이룬다는 폭력혁명논을 굽히지 않고 전개시킬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혁명의 달성을 위하여 남한에 이미 조직되어 있다는 소위 "통일혁명당의 조직을 부식하는 데 전력을 기누릴 것이" 예측된다. 또한 293부대, 124부대와 같은 무장특공대를 대량 양성 훈련시켜 남한 각지역에 암투하여 소위 "반혁명세력" 약화를 위한 공작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고 "인민정권" 또는 응공정권이 수립되면 그와의 협상하에 평화적인 남한 적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야망을 계속 견지하여 나갈 것이다.

즉 5차 당대회에서 6계년계획을 제시한 만큼 다음 1970년대 후반까지는 '남조선 혁명노선'은 그들의 변함 없는 기본 입장으로 견지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2) 수행 방도 (통일방안)

1971년 4월에 제시되었던 8개조항에 걸친 북괴의 통일방안은 그 이전부터 여러방면에서 제시해온 모든 통일방안의 집대성이며 또한 이 방안은 앞으로도 변치 않고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이는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 방안으로 제시된 8개항의 만큼 북괴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소위 '국가노선'과 함께 통일문제도 이 노선의 테두리 안에서 유지되어 나갈 것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방법으로서 결남부협상은 남북총선거론 연방제론 교류론 10만선의 감준론 등 각종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그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이며 아울러 '자주적'인 방법으로 외세의 간섭없이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적십자사회의에 대해서는 북괴는 북한주민

들에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해온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려 할 것이며 "남조선 혁명론"의 "정당성"과 북한의 혁명기지강화를 위한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정책의 정당함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적십자회담을 정치적인 회담으로 전환시켜 그들이 주장한 통일방안에서의 정치협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기도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들이 항상 경계하여야 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것은북괴가 회담을 지연시키면서 국제적으로 혹은 장태방 (한국)에게 긴장완화의 성의를 보이는 듯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이른바 힘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정책의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을 보다 공포한 혁명요새로 건설하기 위하여 동선보다 강력한 무력강화의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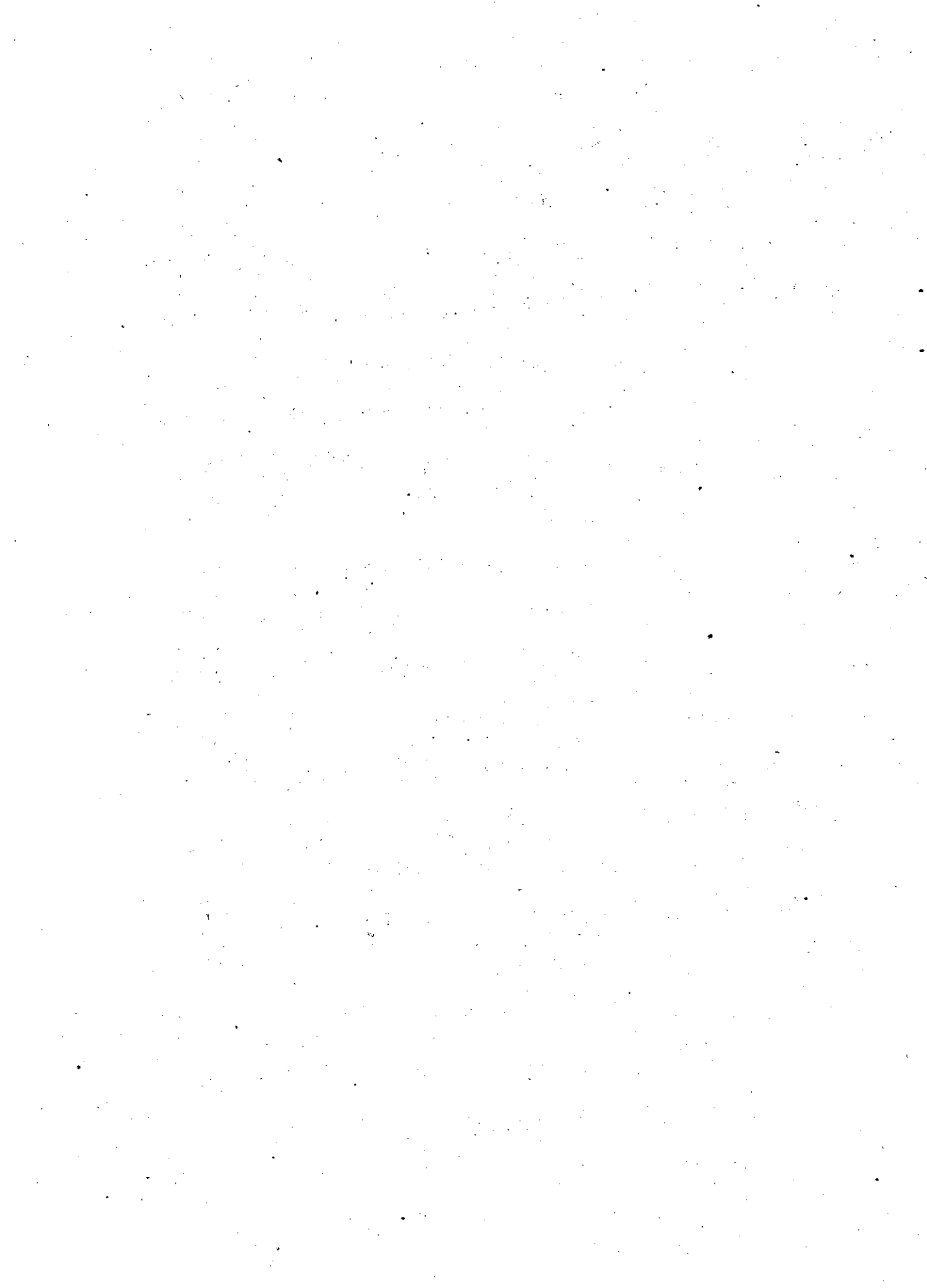
5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통일방안의 선행조건 중 대한민국 원점부에 대한 "본질적인 부정"을 들고 나오는 이상 이러한 이면적 무력강화의 정책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평화적 긴장완화의 분위기에 휩쓸려 월정부를 반대하고 절기하도록 국면의 분위기를 가해시키려 획책하고 북괴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새로운 세력을 남한내에서 부식시키려고 온갖 책략을 다 동원할 것이다.

(3) UN 관계

북괴는 UN과의 관계에 관한 한 어디까지나 UN 자체를 교전상대국으로 인정하여 왔던 만큼, UN을 통한 한국문제의 해결은 계속 반대할 것이다.

또한 북괴가 그렇다고 해서 UN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적극 노력할 것이 예상된다. 물론 한국문제로서의 UN에서 취급된다면 UN의 세력 분포상 중공을 배경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가를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비록 UN 내에서의 세력판도가 북괴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북괴의 기본입장인 "가주적"인 한국문제의 해결주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UN에서의 한국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관계국가회의의 개최를 요구할지 모른다.



## II. 대한민국 통한정책의 과거와 현재

### 1. 통일의 절대성 강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해방이후 한국통일문제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믿고 행동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즉

(1) 한국의 영토분단은 한민족의 진정한 국가생활과 경제생활 영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한다. 한국이 한 국가로 존립하기 위하여서는 한국통일은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2)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마치 살아있는 한 몸을 두쪽으로 절단하여 혈맥을 중간에서 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토분단은 실제로 한국의 국가로서의 생존을 전면 불가능케 한다. 따라서 통일된 한국이 한국의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정치 경제 단위이다.

(3) 현재 한국민족이 겪는 모든 비극과 혼란은 모두가 영토의 분할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한국민족이 거족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근본적 문제가 국토통일이고, 한국통일문제의 해결은 한국이 가진 다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 즉 「키」가 된다.

이상의 몇가지 주장이 2차대전 직후 미·소연합군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이후 한국국민들이 모두 국토의 양단을 극력 반대하면서 미·소 양점령군의 조속한 철수와 통일정부를 별렬히 갈망했을 때 가졌던 강력한 믿음이었다. 다시 말하여 우리 민족이

최근 국토의 재통일을 주장하였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국토의 분단 상태하에서는 우리 민족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국토분단의 조속한 종식만이 한국인이 국가생활을 영위하면서 존속을 가능케 하는 필요한 절대조건이라고 믿었다.

한국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활로는 오로지 영토통일에서만 찾을 수 있고, 따라서 통일은 무슨 값을 치루고라도 얻어야만 하는 절대적 목적이며 우리 한민족의 지상과제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에서 통일논의는 「통일」이라는 목적을 어떻게 너무 절대시하고 당위시하는 주장에 기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어떤 철학과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것이었다. 주어진 국제외적인 현실조건과 계약을 신중히 살펴서 「통일」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따져 분석 할려고 하지 않았다. 막연히 국토통일은 지상과제요 달성하여야만 하는 「당위」이기 때문에 통일은 어떻게든 이루어야만 한다는 태도였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민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비합리적이고, 냉정을 잃고 감정과 감상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한국국민의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자세는 특히 초기 한국통일론의 성격에 신중성 보다는 조급성을, 타협성 보다는 배타성을, 그리고 합리성 보다는 감정과 감상에 치우치는 성향을 주었다. 무슨 값을 치루고라도 얻어야만 하는 통일심취에 장애가 되는 모든것은 마땅히

응징하여야 할 「악」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으로 그 상대를 박멸하는 것이 「정의」이고, 그것도 내릴까지 기다릴것 없이 「오늘 당장」 서둘러 악도를 단행하는 것이 좀더 옳은 것이라는 자세였다. 이러한 한국통일론의 성격과 경향은 해방이후 부터 최근까지 한국국민과 정치인들의 통한 주장과 통일문제를 다루는 자세에 그대로 잘 반영되고 있었다.

김구주석과 김주식 박사가 민족감정에 치우쳐 객관적인 국제정세와 강대국간의 밀려 있는 이해를 외면하면서 남북협상을 통하여 민족주체적으로 남북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하였을 때나, 그후 순수히 통일이란 목적에만 집착하여 준비없이 남북협상을 위하여 평양에 간 행적은 모두 초기 한국통일론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김구, 김주식씨의 남북협상통일론과 노력은 영웅적 행적으로 칭송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들의 주장은 민족주의적 감상에 젖은 이상주의의 허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들 중간파 세력들의 조급한 서두름이 오히려 이들 협상파가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일찍 잃게 하였고, 종국엔 해방이후 한국정치에서 중간파의 정치적 패배를 재촉한 결과를 가져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박사의 무력 북진통일론도 통일이란 목적을 절대시 하고, 그것을 조급히 서둘러 얻으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통일문제를 도덕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면에서 보면 남북협상 주장과 같은 성격을





그가 한국전쟁권인 1949년 11월 10일 조병우 특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이승만씨는 이 편지에서 한국통일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 고위당국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조병우 특사에게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무력으로) 한국을 통일할 모든 면의 준비가 다되어 있다. 다만 무기와 총탄만이 모자란다. 대부분의 북한공산군도 폭동을 일으켜 우리와 합세하여 공산당을 북으로 부터 쫓아버릴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북한인민도 절기하여 폭동을 일으킬 북한병사와 합세하여 공산당을 수천하여 버릴 것이다. 그들은 우리 지원없이도 절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폭동을 일으킬 확정된 날짜만 기다리나 다른 비밀통신기관을 통해 알려 날라고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의 절기를 다소 지연시키는 일인데,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익은 절기후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무기와 총탄의 공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뿐이다.

해방초기에 이승만씨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한국 정부수립후 그의 외교노선을 쫓아 외교 활동을 담당하였던 조병우씨 자신도 통일문제에 관한 이승만씨의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즉 그는 무력만으로 한국통일이 가능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역사적으로 볼때도 국가의 통일을 협상으로 이루한 일은 없는 것이다 즉 19세기 말엽의 독일의 통일이 그러하였고 미국이 그러하였거니와 우리나라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무력으로 통일하였고, 일본의 명치유신 이전에도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시킨 사실로 볼때 모든 국가의 고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단 내지 삼단된 국토통일은 군사적 방법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이데오르기」가 천양지 차로 다른 민주 대 공산이 협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최대의 양보를 하여 평화적 통일을 제기한다면 치더라도 공산도배들은 이를 응락하지 않고 하나의 사상선동전으로 역습할 것이다. ----- 평화적 통일이란 -----

평화공존의 환상색들의 잠고대에 불과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통일은 소련이 민주주의적 자유국가로 되지 않는 한 무력통일밖에 별도리가 없다」

북괴 정권 역시 겉으로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을 계속 주장하였지만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감행하여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 할려고 시도하므로써 그 당시 북괴정권이 지녔던 통한론의 진정한 성격을 백일하에 노출하였던 것이다. 북괴의 무력 적화통일기도 조기의 한국통일론이 가졌던 것과 같은 무모성과 성급성을 가졌

을 뿐 아니라, 아주 주관적 아집에 빠진 환상적 성격의 것으로서 예외가 아니었다. 북괴공산당들도 한국통일을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루고서도 얻어야만 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위업」으로 내세우면서 이러한 「위업」을 위한 전쟁을 「인민해방전」이라고 정당화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인민해방전쟁」을 신성한 민족적 의무라고 까지 주장하였다.

어느 국가의 공산당이건 세계의 공산당은 모두 공산혁명이라는 목적을 위하여서는 방화 살격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투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하에서 이들 공산당이 저지른 모든 비행은 「유토피아」를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믿는 것이 그들의 생략이다. 한국공산당에게는 통일운동자체가 바로 전(全)한국적화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인민해방전」 혹은 「조국통일전쟁」으로 정당화 할 수 있었다. 북괴공산 정부는 그들대로 「인민인중은 그들 공산당편에 있다」는 공산당 특유의 깊은 환상에 빠져 있었다. 북괴정권은 그들이 남침을 명령하여 소위 그들의 「인민해방군」이 진군하여 가면 남한의 모든 인민이 모두 절기하고, 적군에 합세하여 쉽게 권란국을 해방시켜 통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북한공산당들이 통일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했던 것은 이승만씨가 통일전쟁을 일으키면 승리는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것과 꼭 같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공산정권 자들은 또 이대통령처럼 통일을 이루하는 결정적 시기를 아주 조급히 잡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연할 수 없다는 성급한 자세였었다. 하루속히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노력을 단행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권이고 영웅적 용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마땅히 타도하여야 할 「반역자」의 집단을 현실적 고려에서 하루라도 더 존속시키는 것은 비겁이요 그 결과는 민족적 불행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민족지상 명령인 통일전쟁을 거부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6.25 전쟁을 도발시켰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여 보면 그 당시의 한국국민과 지도자들은 모두가 이상에 서술한것 같은 성급한 북한주장을 불가피한 것처럼 받아드렸고 결과적으로 동족상잔까지도 불사한다는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람들은 보다 냉정한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리려 하지 않았던것 같다. 실제로 북한공산정권이 성스러운 민족적 과업인 통일을 이루한다는 명분을 세워 남침을 감행하며 국토를 초토화시켜 민족적 비극을 확대시켰고 장기화시켰던 것이다.

## 2. 무력통일의 실패와 그 교훈

김일성 정권은 이승만씨의 경우와는 달리 소련의 적극적으로 침략성을 띤 대북통일정책과 대한정책에 힘입어 남침에 앞서서 통일을 위한 전쟁준비를 끝낼 수 있었고, 준비가 완료되자 조금도 지체없이 적화통일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북괴의 소위 「통일전쟁」은 남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월등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도 마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개입으로 헛되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북괴의 실패는 미소양극화 체제하에서는 무력으로서의 한국통일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하여 준 결과가 되었다. 한국전쟁의 경험은 또 실사 국군이 북괴군에 비하여 실력이 월등하여 먼저 북진을 하였어도 소기의 목적 통일은 달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주고 있다. 중공이나 소련군이 개입하여 국군의 북진통일을 좌절시켰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6.25때 국군이 「유엔」군과 같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였다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거듭되었던 북진통일 주장은 북괴로 하여금 도저히 대한민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돌발 직전까지도 북괴정권은 평화통일을 크게 선전하는데 비하여 이승만씨와 그의 각료들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무력통일 주장

단을 계속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권은 미국에게 통일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군장비 공급을 공공연히 요구하며 38 도선을 분개점으로 한국분단이란 현상유지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지 않던 미국정부로 하여금 그를 전쟁도발자적 존재로 위협시 하고 오히려 크게 그의 행동을 경계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이승만씨는 더욱이 그 당시 「투루만」 행정부의 미국등 정책에 전면 도전적 성격을 띤 매평양 방위동맹, 한미군사방위조약체결, 그리고 진해만의 미국극동기지화 등을 제의하여 미국정부를 당황하게 하였던 것이다.

미국정부는 그때 중국대륙에서 장개석 국민정부의 몰락을 그 내부의 무능부패에서 주된 원인을 찾고서 더 이상 국부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대신 미국은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정부는 그 당시 국내외사정으로 보아서 이러한 중공접근의 길이 미국의 직접 개입없이 아세아주 특히 극동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공을 의표적으로 승인하는 새로운 대중공정책 (흔히들 「모택동·티토회」 정책이라고 부른다)은 전후 미국이 계속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던 일본민주주의화와 비군국주의화 정책의 목적과 일치하였으므로 더욱 미국국내뿐 아닌 국제적인 극우 괴력파들의 주장인 대공강경노선을 조심성 있게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 2차대전 직후 수년동안에는 미국국민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2차대전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조차도 비판하고 있었고 또 아직은 소련과의 협력가능성을 믿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이 공산세력에 대한 세계경찰권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이승만씨의 북진통일 주장은 더욱 썩지 풍파계의 전쟁도발 내지 부동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루루만」 정부는 남한에 무기공급을 아주 꺼려하였고 북괴의 공격보다는 이승만씨의 북진을 더욱 경계하였고, 가능한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를 통제하였던 것이다. 이승만씨가 되풀이 하며 호언하던 북진통일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괴군이 남침공격하여 왔을때 2가 바치 무기없는 맨손으로 대항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게 하였고 등관전의 그의 무력통일 주장은 한갓 「공갈」로서 북괴의 전쟁준비만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통일정책과 자세는 근본적으로 여러 면에서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이들 모두의 통일정책은 국제적으로 관계될강이 한국통일문제에 보이는 관심과 자세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는 어느 국민이나 정부도 한반도의 통일을 그들 자신의 문제처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뿐 아니라 더욱 수천억불 전비를 쏟아넣고 전쟁을 하여서 까지 달성하여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결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분단된 한국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고 있지 않았다. 국제정치에서는 강대국들이 그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쟁의 대상이 된 한 약소국가를 2 혹은 3등분으로 분할하여 서로간에 세력균형을 잡아 그 분쟁을 해결하여 국제적 안정을 회복하던 예가 얼마든지 있다. 한국분단도 그 한 예에 불과한 것으로 별달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것이 국제정치의 생리이다. 통일이 된 한국만이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정치 경제단위로 믿고 있지 않고, 양단된 한국 즉 한반도에 2개의 정치단위 존재를 인정하는데 별다른 무리를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 한국 국민의 믿음과는 아주 판이하다.

한국과 북한공산정권을 평가하는데도 국제적으로는 우리 한국국민들이나 지도자들의 일반적 주장과는 달리 어느쪽이던 한쪽은 「선」의 집단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악」의 집단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에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만 「좋은」 정권으로, 반면에 북괴는 마땅히 지원 받고 벌받아야 하는 정권으로 간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남북한 문제를 국제정치에서와는 아주 달리 어느쪽이 좋은지를 심판하고 좋은쪽은 지원하여야만 한다는 도덕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한국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지역문제를 다룰때 현실적으로 엄연히 상주하는 쌍방의 힘과 이해를 타협시킬려는 방법 즉 정치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의 길은 보통 남의 일이거나 외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갑과 을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그 성격상 누가 옳으나를 가려야 하는 도덕문제이고, 그런 도덕적 기준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예하여 순수한 종교전쟁이나 이념전쟁) 모든 수단을 동원한 철저한 혈투로서만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실력대결에서 승패가 판가름 되지 않는한 이런 류의 싸움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반면에 분규의 성격이 정치적인 것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 되고, 쌍방이 모두 어떤 모호한 해결책에 만족하여야 하게 된다. 따라서 분쟁해결이 완전하지는 못하여도 타협이 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

초기 한국통일론은 이러한 국제정치 생리에 적응하지 못한 그 비현실성과 허구성으로 인하여 계속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조의 성격과는 상반되는 조급성, 도덕성(윤리성 및 법리성) 그리고 절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초기의 제한 한국통일론의 주장에서 본다면 1953년의 한국전쟁 정전같은 조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한국국민들

의 휴전반대운동을 당면시 하였으나, 그런 반대가 국제적으로는 전면 공감과 동조를 못받았던 것이다. 한국민의 휴전반대운동 실패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한국국민이 가졌던 통일론의 비현실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고, 국제정치상에서 열강이 한국통일문제에 갖고 있는 소극성 비긴급성, 그리고 정치적 타협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휴전성립 이후 현재까지 통한문제는 국내외에서 극히 피상적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이다. 특히 국제정치에서는 이 문제의 논의를 실제로 피하고 있었다. 전후 세계의 지배적인 국제정치체제인 미소냉전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는 그 체제의 산물인 분단한국을 받아 들이는 것이 「정상」이고 현재의 준형 혹은 실세의 타파를 뜻하는 통한은 그 「정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것 같았다.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분단한국이 고착화되어 기점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질수록 국제적으로는 더욱 통한논의를 문제삼음으로서 현재의 「안정」에 불안은 조성할 위험을 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보수성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제정치상 필요한 지혜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관계열강들이 통한논의를 실제로 회피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4반세기가 지난 오늘 현재에 와서는 한국국내정치에서도 통한논의는 상당히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 논의는 초기와는 달리 어떤

희망을 처루고서라도 통일을 쟁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많이 후퇴하여 있다. 분단된 상태가 이제 만 25년을 넘기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한 기성질서의 변화는 그 질서하에서 얻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변화 혹은 변경은 누구에게나 장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감을 주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분단 초기에 한국사람들이 조국통일을 주장할때 가졌던 근본 전제 즉 「모든 한국민은 모두 한결같이 한반도의 통일을 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대로 의심없이 받아 들이고 있는것 같지 않다. 통일이 반드시 자기에게 좋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의 수가 현재는 분단직후에 비하여 분명히 많이 줄어 있다. 더욱 등족상잔이란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다시 초래할 전쟁을 하여서 까지 그리고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 그간 겨우 건설한 어느정도 규모의 산업시설 및 공장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채 파괴하면서 까지 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더욱 소수일것 같다. 분단상태하에서는 우리 민족이 결코 살 수 없다는 이전까지 확고했던 전제도 현재는 상당히 흔들려 있다. 한국국민도 이제는 분단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조건하에서 최선의 길을 찾겠다는 자세와 인내심도 가지게 된것 같다. 따라서 조급성, 도덕성, 절제성등을 큰 특징으로 하였던 초기의 한국통일론은 더욱 그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류

의 통일론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숨기고 있으나 깊은 「더림아」에 빠져있는 것이다.

### 3. 한국통일론의 현실화 경향

「이상주의」적인 초기 한국통일론은 국제적 현실과의 깊은 「갭」을 둔채 오랜동안 속수무책으로 내버려져 있었다. 명분이나 구호에 그치는 전혀 현실감 없는것이 지나지 않았으나, 이러한 통일론은 그 특징인 절대성, 절대성, 윤리성으로 하여 한국민을 다시 전쟁으로 돌고 갈 위험을 도개 안고 있는것이였다. 더욱 위험했던 점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오랜동안 그와 같은 허구투성이고 비현실적인 통환론을 절대시 하고 신성시 하는 경향마저 가졌었고, 그러한 태두리를 벗어나는 통환논의는 금기시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우리 한국 국민과 정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미숙하였고, 국제적 현실적응감이 결여되어 있었던 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북괴가 저지르고 있는 무력도발도 이런 미숙과 국제적 현실적응감의 결여가 가져오는 위험한 불안년의 좋은 예가 된다.

미소양극화 체제가 확고히 존속하는 한에서는 「이상주의」적 한국 통일론은 그래도 존속할 수 있었다 그랬던 것이 일본 중공의 등장으로 하여 미. 소체제가 4극적인 다원체제로 변하고 있는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하여 한국통일론의 약점이었던 그 비현실성과 허구성이

더욱 두드러졌고 그것이 가진 「더렘마」도 더욱 짙어졌던 것이다.

현공화당정부가 최근 수년간에 한국통일론을 상당히 현실화 할려고 노력하여 현재 많이 시정되고 있는 것은 한국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할 수 있다. 1966년 6.25 16주년 담화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시기는 통일의 민족적 기초인 경제자립의 반석을 공고히 하고 민족 역량을 축적하여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는 70년대 후반기가 될 것이다」고 선언하여 한국통일논쟁에 새로운 심경과 방향을 획기적으로 주었었다. 이 선언은 「선권설 후통일」이라는 한국통일방법에 새 공식을 봉계하여 그때까지 통일론의 특징이었던 무책임한 조급성을 무마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또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통일이 민족의 숙원이고 국가의 지상무포락 하더라도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피하여야겠다」고 선언하여 전쟁을 하여서 까지라도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종래 사고방식을 점정한 것도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박대통령의 이 「동족상잔의 전쟁불원」 선언은 종래까지의 한국 국내에서의 통한논의경향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큰 변화였었다. 이 선언은 그때까지의 대개의 통일논의가 전제하였던 통일의 절대성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었다. 통일필요의 상대성을 인정 강요한 것이 된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국내의 정세하에서는 무력수단

에 의한 일방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외에 통일이란 목적이 우리가 절대로 피하여야 하는 동족상잔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동족간에 피를 흘려서까지 통일을 기도할 수 없다는 통일필요성의 상대적 평가에서 나왔다. 이렇게 통일 필요의 상대성을 받아 드린 것은 종전까지 명목과 감정에만 사로잡혀던 타성으로 부려진 칼피이다. 이것은 또 한편 종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입장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려 한 것에도 큰 수정을 가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한국통일문제에 접근하면 무엇보다도 선 악을 가리고 흑 백을 따져서 악과 흑은 지체 없이 소탕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악을 보고도 소탕하지 않는 것은 불의일뿐 아니라 그 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략도에 아주 조급하게 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당사자들은 싸움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분석한다면 박대통령의 「선진설·후통일」 주장이나 「동족상잔불원」 선언은 그 근본성격상 윤리적 도덕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절치적이고 현실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 조급성과 절대성을 불연하고, 전쟁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다시 1970년 년두기자회견에서 한국통일문제에 언급하여 그가 이미 제시한 새 통일방안에 맞추어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

70년대를 통일의 년대라고 하는 것은 심급한 표현이지만 70년대가 통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지를 먼저 점령, 통일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조국근대화는 통일의 중간목표로서 70년대는 이 중간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로 생각한다. 통일방안은 앞으로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종래의 방안에 변동없다. 다만 북괴가 전쟁을 도발해 오면 문제는 달라진다. 통일의 접경은 역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산, 건설, 수출을 잘해서 국력을 강화함으로써 북괴보다 월등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이상과 같은 한국통일전망은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참작하면 더욱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70년대 후반기(혹은 80년대)까지는 한국통일세의 국제적 제약조건이 상당히 약화(국제적 조건의 중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되어 버릴 것이다. 그때가서는 우리 한국이 가진 주체적인 힘이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실상 통일을 위하여 대비하여야

할 시기는 그때인 것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하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경제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고 국가생활이 가능하다. 우선은 분단을 받아들이고서 이 상태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현명한 통일의 첩경이다.

이상과 같은 전제는 국제사회가 지금 받아드리고 있는 현실적 한국분단론을 받아드리면서 장래에 대비하자는 것으로 아주 위험하였던 종래의 한국통일론으로 부터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현정부의 새로운 통일자세는 일반대중의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과 자세에도 영향을 주어 국내의 통한논의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았다.

1970년 8월 15일 박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그 후 평화통일우상을 다음과 같이 밝혀 한국통일논의를 더 한층 현실화하여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국토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며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 - - -

나는 이미 수차례 걸쳐 통일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러



우리의 주체적 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  
 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 보고, 특히 북한의 퇴폐적인 사  
 회체제도 시대의 전운(進運)인 자유화 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질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  
 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나는 광복 4반세기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 - - - -

북괴는 무장공비남파등의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  
 위 「우려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독립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  
 을 기도해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  
 게 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  
 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  
 으며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

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적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 - - - -」

박대통령의 「8. 15 선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점 때문에 동북논의에 새로운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통일자체를 논의할 수 없고 현재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통일을 위한 조건조성이다. 통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면 그 단계에 가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남북한이 조성하는 준비기간이다.

둘째, 적어도 이 준비기간동안만은 남북한이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다른말로 하면 한국정부가 북괴가 전쟁만 포기하면 남북한간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유엔」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조차 북괴의 참석을 받아드려서 까지 북괴에 남북한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존을 받아드리면서 현재의 같은 분단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처나 제안을 하겠다고 한 점이다」

셋째, 이미 남북한의 관계는 「누가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나」를 놓고 싸워야 하는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는 것을 선언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남북한의 관계가 주로 군사력 경쟁이란 면에서만 그 대결상이 말하여졌는데, 박대통령은 장차의 남북의 경쟁과 대결을 두 지역이 가진 사회력 그리고 경제력의 대결이란 것으로 그 성격을 밝히므로써 남북한간의 중요한 신주면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북괴를 현실적인 입장에서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받아드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점이 있어서 북괴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차 만약 북괴가 전쟁준비만 포기하면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점 때문에 박대통령의 「8.15 선언」에서 밝혀진 평화적인 통일구상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전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것에 틀림없고 해방이후 약 25년 봉쇄되어 있던 한국 통일논의에 새로운 방향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현실감 있는 통일구상이 한국정부내의 책임자들에 의하여 계속 밝혀 통일문제논의가 진실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종필 총리는 1971년 8월 7일 국회본회의에 출석하여 안보문

제 질의에서 「북전이 갖추어 지고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괴뢰집단 피수와 입지만 언제가는 얘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발언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김총리역 이 발언은 물론 여러가지 조건을 붙인 것이나, 이것은 한국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북외 자세에 보인 상당한 포용성을 나타내었다는 뜻에서 중요하다. 또 이것은 대북외관계를 종전처럼 윤리나 도덕적 입장에서 규탄하기만 할려 하지 않고 북괴를 적어도 힘을 가진 한 집단으로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하다면 「입지만은」 김일성도 만나겠다고 한것은 획기적인 발언이다. 이것은 곧 북괴집단과의 문제를 도덕적 입장에서 아니고 정치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김총리는 또 지난 9월5일에 외국 기자와의 회견에서 한국정부는 북괴와의 평화적 접촉을 추구하는데, 가능한한 모든 일을 다할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북괴와의 정치적 타결에 이르는 데는 10년이 걸리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김총리 역시 한국통일의 시기를 10년후로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서둘러 통일이 되기 힘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최근인 11월1일 김영선 통일원장관도 국회외무위 주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 박대통령의 「8.15선언」 이후 계속성 있는 원정부의 통일문제에의 접근자세를 밝히고 있다. 즉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이 지난 26년간 일보의진전도 없기 때문에 민  
간교류, 경제교류, 수상 및 자료급 회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독  
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 북괴에 대한 개방정책, 자유화 촉진책으로 북괴가  
등구공산권 정도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

----- 남북경제 교류를 가상, 우리는 북괴에게 70 등  
생활필수품, 석유화학 제품을 보낼 수 있고 북괴는 철광석, 석탄  
등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다고 본다. 올림픽을 위한 단일팀구성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북괴교과서를 연구, 이에 대비한 반공교과  
서 작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북괴의 자료를 그대로 역으로 반공  
교과에 이용하는 문제를 건의중에 있다」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적십자회담도 박대통령이 「8. 15  
선언」에서 밝힌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제거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  
의 하나로 간주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정부는 박대통령이 밝힌 새  
평화통일 구상에 상당히 충실히 쫓아 노력하고 있는것 같다. 통일  
이라는 큰 목적을 영장 얻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제한된 접촉 및  
교류 — 특히 비정치적 분야 — 를 하여 보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인것 같고, 이것은 그 어느때 보다도 현실화된 통일정책의 일환  
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현재와 같은 한국정부의 통한 정책은 크게 봐서 2가지 요  
인에 의하여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첫째, 북괴의 반응이다. 북괴 역시 실질적으로 한국처럼 평화공존을  
받아드릴 것이냐에 크게 달려 있다.

둘째, 우리 한국의 실력이다. 문화 및 경제교류를 과감하게 제안하  
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준비와 실력에 달려 있다.

현재 한국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통일안은 그 방향만은 옳게  
정하여져 있다. 문제는 그런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 국내  
적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장에서 논할 국제정  
세의 변화도 현재의 통한자세가 옳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  
여 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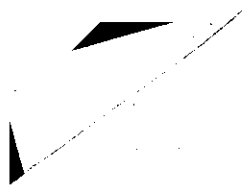
I. 과거와 현재와 통한관 비교 (1970년 8. 15 선언 이전과 이후)

|        | 과 거          | 현 재              |
|--------|--------------|------------------|
| 통일(목적) | 절대시          | 상대시              |
| 시 기    | 조급성(지금 함장)   | 점진성(시기를 기다린다)    |
| 접 근 법  | 도덕적 접근(비타협성) | 정치적 접근(타협성)      |
| 주된 수단  | 군사력(군사력우위강조) | 외교적 방법(경제건설우위강조) |
| 분단상대   | 남북공존거부       | 남북공존인정           |

II. 국내적 통한관과 국제적 통한관 비교  
(1970년 8. 15 박대통령 선언이전)

|        | 한국 내 통한관     | 국제적 통한관     |
|--------|--------------|-------------|
| 통일(목적) | 절대시          | 상대시         |
| 시 기    | 조급성(급진)      | 점진성         |
| 접 근 법  | 도덕적 접근(비타협성) | 정치적 접근(타협성) |
| 주된 수단  | 군사력          | 외교적 방법      |
| 분단상대   | 남북공존거부       | 남북공존인정      |

※ 현재와 국내 통한관과 국제적 통한관은 같은 심적을 보이고 있음





### Ⅲ 국제정세 변화와 1 전망

#### 1.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

세계제2차대전 이후 국제정세는 몇단계로 변화해 왔다. 첫째로, 1930년대에는 국내전문제로 인하여 세계정치에서는 아직 지배적 세력화 하지 못하였던 「소련」(U.S.S.R)이 1944년 대독전쟁의 승리와 연합국인 미국의 힘의 지원을 힘입어서 1950년대에 이룩한 공업력 성장과 경제성장을 ① 배경으로 세계정치 무대에 「초강대국」으로 진출을 피하게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팽창주의(expansionism) 사상의 부활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산주의혁명의 본질적 사명이기도 하였든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새 판도를 형성하였다. 영, 불, 양국은 식민지들의 독립으로 축소되고 미국과 소련만이 힘의 대평화를 이룸으로써 양국화된 국제체제를 형성했다. 1950년대는 핵무기 외 대북강권도량(ICBM) 등의 발전은 초강대국간의 무력대결을 인류종말의 위험도까지 내포하게 되자 1960년대 부터는 평화공존 무드속에서 또한 다른 세력들의 등장속에서 미·소의 양국체제는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속에서 국제정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황을 가져왔다.

#### 2) 양국체제로 부터 힘의 다원화

현미 국제정치에 있어서 「힘」의 의미는 단순한 물량적 지수로서  
단은 측정하기 힘든 성격을 지니고 있다 「힘」의 물적기저와 그  
런 물력의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군사력 그리고 끝으로 군사력의  
정치적 기능사이에는 간단한 산술적 방정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  
는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정치 의 현실에 있어서의 「힘」의 현상 혹은 역학적원칙  
단으로서 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점에서 볼때 미국과 소련은 용인력과 핵설력에 있어서 각각  
가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으리만큼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  
제정치에 있어서는 그외같은 「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  
체에 놓여 있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핵무기권 전략상으로 볼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기능이 있는것이며 즉 오늘날 핵무기권 소유국 그  
실력은 강대국들의 「힘」 전지역을 맡는데에 불과하는 「현실」을  
간파할 수 없다

둘째로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전면전정은 도발가능성이 쇠약하여  
진 점 때문에 그외의 비핵전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비핵적제한 전정에 있어서는 초강대국과 기타국가간에 힘의 차  
이가 무의미 하게 되는 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략적 현실이

한국통관과 원상진정에서 미국이 직면한 한계점의 원인이었으며 또한 소련이 중공과의 충돌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적반사 여건이라 할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조강대국의 역학적 작용을 약화시켰으며 국제체제는 1960 년대에 서서히 힘의 회복 또는 「힘」의 건설을 꾀하였던 중공 일본 및 「유럽」권 등을 주요행위자로 포함케 되었다 특히 서구는 브란트의 *ost-politik* 프랑스의 제3세력형성노력(미 중공접근 1969년, 구주공통시장의 건설 1958년 반NAFTA 체제정책 등) 등으로 아.아 약소제국에게 대하여 중공과 더불어 양극세력에 대한 반체제운동을 벌여온것도 사실이고 상당히 성공한것도 사실이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다원화 되었다

중공의 핵무기보유 와 일본의 경제력 신장은 「힘」의 다원적 분배를 촉진시켰다 다원화된 상황아래에서의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을 낳게 되었다

b) 「블럭」체제의 붕괴과정

「힘」의 분배의 다원화는 자연히 「블럭」의 일원적 내부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블럭」구성원의 위상가능성 까지 조래하였다 이것은 같은 이념 체제의 국가들간에도 국가이익의 추구방향이 서로 엇갈릴 때는 서슴치 않게 되었다

또한 소위 이념적인 분구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하더라도 「블럭」체제의 붕괴는 「힘」의 다원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세계정세는 「불럭」 체제의 무의미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켰던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50년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중공과 소련의 대참과 긴장의 서투는 1960년에 들어오면서 공개적인 충돌과 정면적인 대결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 소 틈장은 양극간에 내부의 혼계를 넘어 서 국제정치의 쇼윈도우 (show window) 라고 할 수 있는 U.S에서 열점으로 갖게 되었다. ② 그뿐만 아니라 공산블럭 내에서는 또 이미 독자노선을 따르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알바니아」 등이 있다. 이같은 현상을 내부적 다원화 (polycentrism) 라고 볼수있다.

이같은 작용은 비록 공산권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서방 「불럭」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드골시대의 「프랑스」가 미국과의 분리정책을 사용하였다. 서투는 이른바 동맹정책 (cost politik) 은 추후하게 이르렀으며 월남전쟁에서 미국이 서방 「불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1950년대에 볼수있었던 서방 「불럭」의 내적단결과 외적행동동일은 다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불럭」 체제의 붕괴는 물론 동맹관계의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모든 동맹관계는 고정된 「멤버쉽」에 기저하여 내부적으로 는 소위 초강대국의 영도권하에 놓인다는 양극체제의 대정제당은

계속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불력」 체제의 붕괴는 고전적 세력균형체제 에로의 복귀를 뜻하며 유동적인 동맹관계는 더욱 활발히 진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불력」이나 「동맹」 관계에 고정화 될 필요 없이 유동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모든 유리한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적 입장이 중립국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립의 중립국 즉 인도 같은 나라는 과거의 양극체제에서와 같은 특수한 전략적 혜택을 기대기 어려워졌다

그와 반대로 과거에는 「불력」에 속했던 국가들이 새로이 전개되는 것이다

c) 중립국적 위치의 보편화

「힘」의 분배가 다원화 되고 「불력」 체제가 붕괴되면서 중립국만의 특수한 전략적 위치는 중립국 이외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다극적 국제체제내에서는 모든 동맹관계가 동일하게 잠정적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며여 중립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분리시킴으로써 지배할 수 있다는 고전적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따라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단히 모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는 성공과 실패의 쌍곡선 속에 있

게 된다

d) 국가간 투쟁의 유한성

국제체제의 다원화는 양극체제에서와 같은 극한투쟁을 유효한다  
그 이유는 모든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적성적이건 아니건간에  
본질적으로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또한 항상 제3의 세력  
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과 현실에 있다는 것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과 중공간의 극한투쟁은 소련에게 이로움기 때  
문에 미국이나 중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합리적인 것이며 그 밖  
의 어느 강대국 사이에도 극한투쟁은 동일한 논리로서 비합리적이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가능하여 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간에 있어서 중공이나 그밖에 강대국  
적요소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핵무기의 특수한 전략적 성격으  
로 인하여 1950년대에서와 같은 극한적대결은 지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62년 「쿠바」 위기를 변기점으로 하여 미 소 관계는  
순수한 대결에서 대결과 대화의 병행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  
는데 핵무기 실험의 부분적 금지조약의 체결을 위시하여 제네바  
군축회의 그리고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등은 모두 새로운 유한  
적성합성향의 증거이다 그러나 강대국 틈속에서 이념적 대립 또  
는 종교적대립 이라는 현실속에 처해있는 비강대국들의 국지적 관  
점은 강대국간의 유한적 성향성향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향후 몇년간은 적어도 강대국간의 관계가 대결과 대화 성향과 협  
상을 포함한 소위 유한 투쟁적 성향 (Non-zero sum game) 을

나라별 것으로 주축할 수 있다

e) 국제정치상의 현실주의와 한국의 입장

국제관계에 있어서 고전적 현실주의 방식(19c)은 국제권력의 다원화 시대의 더부러 역할을 했다고 볼수있다

이념에 의한 「동.서 불력」의 압력을 무너뜨리게 된것과 국제적 인 예를 들면 프랑스의 제5공화국(드골)의 외교정책③에서 그 압박을 뚜렷하게 하였다

좀더 역사적으로 사슬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후 아.아 제시민지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도적 또는 관리적 태도라는 현실적 요구에 영.불 양국은 현실주의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 이후에도 미국권으로 부터의 철회와 중공승인(1964년) 같은 것은 소위 현실주의적 태도의 표본으로 간주되었다

19세기에 있어서도 현실주의는 구주에서 나왔던 것이다

20세기에 있어서도 역시 구주정치의 소산④이 되었다 이같은 이념적인 태도는 다원화 되어가는 세계정국에 과감되어 드디어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까지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⑤

이론과 다른 독트린은 현실적 방안에 소산이기도 하다 일본의 정.정 협력주의도 현실주의적 태도로 간주된다 서방 강대국들의 현실주의적 태도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입장에 많은 변동을 갖 어 왔다

~102~

그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상에 권력의 다원화적 분배와 같은 새로운 판도가 필연적으로 초래케 단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독은 같은 분단국이지만 막강한 국력의 뒷받침과 오랜 경험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현실주의적 적응이 가능하였다 (주④참조)

이같은 현실학에서 한국은 몇가지 변화에 적응해야 될 입장에 직면한다

첫째 대미일련 외교의 지양으로 부러 다원적외교의 요청

둘째 타블러 특히 구주와 아아지의 제국에 대한 외교체제 개선

셋째 신축성 (伸縮性) 있는 외교전략 필요

넷째 대결과 대화의 병립외교의 요청 등을 우선 들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방향을 잡고 다음에는 한국문제들 둘러싼 국제체제의 주황위자인 미국, 소련, 중공, 일본 그리고 북파와 그 제국과의 작용등을 자세히 분석해 보는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분석은 한국통일문제를 위한 가능한 정책로서 들의 방향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상징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외교정책 수립에도 긴요한 바탕이 될것이다



## 2. 강대국들의 동향

### a) 미국의 대소, 대중공 및 대일관계

#### 가. 미·소관계

미·소 양대핵국가간의 관계란 힘의 다원화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관계라는데에는 불변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행정부의 기본방향은 대결로 부터 협상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데 있었다. 소련과의 협상형위는 많은 난관을 포함했었다. 소련과의 가장 중심적인 협상은 SALT 회담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협상은 핵·불 양국까지 포함한 1970년 3월 이래 진행되었던 백림에 관한 회담이다. 이 두 회담의 결과여하를 앞으로 닥쳐올 시대(중·장기 전망)의 유럽에 있어서의 등시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추측된다.

중동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2년간에도 미·소간에는 수많은 마찰사건들이 존재하였다. 한편 그들간에 별 이전없이 합의되는 점은 핵병기의 제한으로만 늘 압축되었다. ⑥

이와같은 정책은 요약해서 미·소의 관계가 대결로 부터 협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본질적 요소가 핵무기적 파괴력으로 부터 오는 위협인것이 아직도 여전함을 증명한다. 그들은

진정한 타협과는 아직 멀다 ①

닉슨의 새외교전략이 가져온 소의 닉슨 속크는 소련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미·중공 접근은 소련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비책을 세우게 할것이다. 그러나 중·소 대립이란 이미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대미정책의 기본방향은 앞으로 수년내로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공간에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극적인 사건들은 소련에게는 예정했던것 보다 빠른 감을 줄것이다.

소련 외교전략의 기본구상은 동서전략의 균형에 있다. 즉 유럽의 전선과 아세아전선으로 군사력이 대분 되므로 중공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유류」 정세의 안정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① 「베르린」 협정체결 ② 「유럽안보회의」 제안 그리고 ③ 서독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서둘러 하였다.

이같은 외교전략은 서방에 있어서의 소련의 군사적 방위력세를 정치적 안정으로 대치시키고 지상군 병력을 동방에 집중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국과의 SALT 회담이나 핵확산 금지조약 체결등은 유럽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세로 보아 미국과 소련은 다같이 한반도에

대하여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status quo* 가 아닌 다른 상해는 소련의 입장과 전략적 견지에서는 이로운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통일은 북괴가 중공과 밀착되어 있는 한 소련으로서는 이득이 없다. 또 반대로 한반도가 민주통일을 이룩하는데 대해서는 소련은 반대할 것이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중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가장 바람직 하게 생각하는 세력은 중공뿐이 될것이다. 미국은 대소관계 및 대중공관계상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계속 밀고나갈 전망은 확실한 것이다.

나) 미·중공관계

미국과 중공은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이 북평을 방문케 되므로써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게 될것이다.

원래 미·중공관계 개선의 이니시아티브는 닉슨에게 있었다. ①

과거 20년간 미국의 대중공정책은 봉쇄정책으로 정의된다 (Containment Policy) 특히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중공군의 출전은 미국인에게 중공관을 팽창주의적 세력으로 고정시켰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미국에게 충격적인 경험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내에서는 ① Truman 매 맥카רת의 대립 ② 「마카시즘」 ③ 부뢰커 개헌안 등을

포함하는 정치위기조치 채택되었었다 이것은 미국이 중공으로 부터 받은 속크의 결과였다

그 결과 ① 1950년 6월 27일 미7함대의 대만해협 파견 ② 1951년 9월 일본과의 안전보장조약 체결등의 심각한 판도를 산출하였다

중·소분쟁의 산물로서 중공은 소위 「민족해방운동」의 이름아래 아·아 후진국제국의 Leadership을 모색하며 그 수단으로서 전략적 계리라건의 개념을 앞장 세웠다 이것은 소련에 못지않게 미국도 위협을 느낄수 있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이 중공의 평창주의를 인식할 수 있었던 동인이었다

한편 미국은 미국의 중공학자 (China Problem Specialist) 들의 연구등을 통하여 중공의 대외정책행태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이해케 되었다

1) 대외행위의 기본을 중공도 자국의 안전보장에 그 동인을 두고 있다.

2) 중공은 자국에 속한다고 하는 영토회복을 추구해 왔다

(대만 및 중·소 국경분쟁) 이것은 미국인들은 irredeu-tism 즉 19세기 이탈리아 민족통합운동과 같은 것으로 보아주었다.

3) 중공의 유비대포천 정회와 안보이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노력이 1개의 주요강대국으로서 인정받겠다는 노력으로 보았다 이것은 금년에 실현된 셈이다. 이같은 중공의 노력은 1950년대에는 대체로 소련·불력내에 일원으로 소련의 헤게모니 하에서 행하다가 1960년대에는 소련권을 벗어나 소련과의 헤게모니 경쟁전을 벌였으나 체코사태(1968)를 계기로 동주는 소련권임을 스스로 인식하므로 한계점을 느꼈다 1960년대 말에는 「진보도 사건」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직접 소련으로 부터 군사적 압력을 받게된다

이 결과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겼다

- ① 중공정부 외교부 신문사를 통하여 1969년 2월 20일 바르샤바 미·중공 대사급 회담을 재개토록 하였다
- ② 문화대혁명의 종식으로 대외관계를 적극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공은 미국과의 접근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 ① 중공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력의 감소, 즉 대만과 한국으로 부터 군사력의 철수를 가장 중심으로 요구할 것이다.
- ② 일본이 미군을 배치하지 않도록 일본의 군국화를 반대

할 것이다

③ 한반도에 대한 요구로서는 통일을 위한 어떤 종류의 특정안은 안내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논리적으로 미국을 설득시키는데 있어서 소련의 군사적 압력을 핑계로 미국의 군사압력 감축은 통할 것이지만 그 이상은 곤란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약화와 일본의 경제적 지원약화(주4원칙) 등은 한국문제를 국내문제로 하고 북괴가 단독으로 북한민족을 제압할 수 있는 장기적 풍토 조성에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10년 이내와 같은 중기적 목표로는 될수 없는 성질일 것이다

이같은 중공의 태도는 특히 새로 411에 들어온 중공 사절들의 발언을 통하여 잘 들어나고 있다

이런 요구들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감소정도는 할 것이나 중공의 요구에 완전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로 한국문제인데 여기서도 대만해협과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미국의 감축은 중공이나 미국이나 공히 이

를 주장 또는 실천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미군사력의  
완전한 공백은 일본의 진출을 불가피 하게 하므로 중공  
이나 미국은 공히 이를 취치 않을 이유가 있게 된다  
따라서 전략상 공약의 상징으로 극히 제한된 소수의 미  
군만이 남게 될것이다.

이와 같은 미군의 상징적인 존재는 지상군의 전투력으  
로서는 보잘것 없지만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조정  
키 위한 정치적 담보가 될것이다. 이 상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계속될것으로 추측된다.

#### ㄷ). 미·일관계

미·일 관계는 2차대전 이후 오래동안 패전적 일본의  
입장과 점령국적 미국의 입장이라는 기본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우선 일본의 경제가 1960년대에 크게 성장됨에  
따라 비협실성을 들어내게 되었다. 일본은 미·일안보조  
약의 보호장막 속에서 이른바 국가방위비의 지출도 별로  
없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국제적 분쟁에서 중립적  
노선을 띤 「정경분리」의 2중외교정책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3위를 기록 하였으며 중공의 새위치 등 사태가 일

본을 [경제동물] *economic animal* 에 머물수 있는  
제반조건과 환경으로 변하여 갔다 특히 미국의 태도의  
변화는 일본의 정치적 움직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들면 ① 닉슨의 중공방문 ② 미국의 수입  
부과세 10% 부과와 금태환중지발표 ③ 엔화재평가의  
압력 즉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중공의 접근과 닉슨 독  
트린에 의한 자신의 군사적 역할의 재조정은 일본으로  
하버금 동아시아에서 소련 및 중공세력과 대치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에 미국의 오른손 역할을 사켜보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하에서 오키나와  
와 류큐도의 행정권 반환이 체결 됐으며 일본수상 사토  
는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기요(*essential*)하  
다고 발언케 되었다 (1969년 11월 닉슨 사토 공  
동성명) 또한 (대만)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주히 중요하다고 표명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무역관계를  
갖고 있고 기반은 건전하다고 하였다 ② 이같은 관계  
때문에 이미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것은 틀림없지  
만 타면 소련과의 접근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상당한 긴  
장의 저류(底流)가 흐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



의선진 제국은 누구나 “중국제적”에 대한 시장적 동경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중국제적 시장에 대해서는 항수에 젖어 있다고 이미 1960년대 초기에 일본경제계를 둘러본 서구의 한 경제학자는 발언하였다. ⑩

특히 이 중공시장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에게 아세아 방위에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것이며 엔화평가절상 같은 구체적인 압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장차 일본이 아세아 방위에 대하여 부담을 필연적으로 달게 될 것이며 미국의 일본내 군사기지 사용도 그 독자적 행동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며 일본의 정·경분리적 태도는 불가피하게 수정될 것이다. 아세아에 있어서 일본의 지도적 위치는 미국의 감축과 반비례해서 증대될 것이며 일본의 경제적 침투지역국가들의 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 정책방향은 냉전시대의 미국이 수행한 것 같은 군사원조의 방법보다는 ① 세력균형하에서 또 ② 협상유지하에서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는 일본인들에 “상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력은 한편, 착실히 정비되고 있다. 즉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5개년)에 의하면 총16/억불을 육해공군 건설에 쓰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방위예산 규모가 제2위가 된다. 아세아에서는 비핵무력만 따지면 중공과 맞서는 위치가 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의 일본의 재무장은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등 제국은 일본의 군주화에 대한 전시대적 불안감이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년내로는 강대국 일반수준의 군사적 역할은 스스로 자제할것임이 틀림없으나 현재 개입하고 있는 경제이권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입준비는 항상 완비할것은 틀림없다. 어느 지역보다도 일본이 일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있는 지역은 「마라카, 해협(海峽), 대만해협 그리고 한반도이므로 이지역을 위호한 강대국의 역학적 관계로 보아 일본세력의 활동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게 되어있다고 본다.

2) 일본의 대소 및 대중공 관계

일본이 대공산권 관계는 지금까지 미국의 막강한 방위력의 울타리 안에서 소극적 자세로 「정경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교를 부려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본내의 다원적 현상을 이용하여 중공과의

관계는 친중공인사를 통하여 소련과의 관계는 친소파 공산주의자들 통하여 제반 교섭을 행하여 왔다 그들의 이면에는 항상 대자본가들이 있었다 즉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들이 조절하고 있고 이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모든 관계를 추진해 왔다

이같은 개괄적인 경위로 볼때 통상외교의 이니셔티브는 대개 대재벌측에 있다

일본의 대소관계에서 획기적인 것은 시베리아의 공동개발제의를 들 수 있다.

일본중공업의 원료 확보량은 대체로 3년분의 재고가 있으며 중동의 석유, 알라스카의 원분과 천연가스, 미국의 원료등에 의존하고 있어 항상 장거리의 해로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의 시베리아 개발은 전략재료의 보고(寶庫)로서 일본중공업 지도층의 해묵은 숙망이라고 한다

일본과 소련은 다 같이 중공세력팽창을 견제하려는 경제외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본정치가 노리는만큼 수확을 올리도록 국 제정치의 현실이 용허치는 않을 것이므로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에 소련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중공 주변국가들과

통상교섭 및 수교관계를 맹렬히 추구해 왔다 이것은 모두  
중·소 대립의 역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대외관계의 지각변동에 민감한 일본은 전쟁상대의  
배후지인 시베리아 개발에 더한층 관심을 갖게 된다 만약  
일본이 소련의 요구에 의하여 계속 시베리아 개발에 개입하  
게 된다면 업계의 추정대로라 수백억 달러의 자본투자가 진  
행될것이고 이와같은 협력증진의 결과로 소련의 반중공 내지  
는 대외 중립정책을 취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극동의 현 방위구조는 파국을 뜻하며 일  
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소련과 맞서는 즉 극동 전반에  
걸친 전략개편문제 까지 발전케 된다

그러나 「현실」로 보아 수년내로 이같은 상태가 현실화될  
근거는 없다 또한 자민당 정권이 있는함은 현재의 균형에  
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일본은 미·중공관계 개선에 중재역을 자처해 왔다 그러  
나 이른바 "닉슨 쇼크"로 인하여 대중공진출에 있어서도  
거물급 경쟁자로서 미국을 다시 인식해야 했다

일본의 대중공진출은 난관이 많다

중공은 ① 정경분리정책 포기를 요구한지 오래며 최근에는  
 ② 주4칙이라는 제한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공으로서의 일본의 진출을 미주과의 교섭에 의하여 견제할  
 것이 예상되므로 소련의 대일접근은 이에 비례하여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현재 일본의 대공산권 교역실적은  
 전체의 10% 내외이다. 이같은 무역구조가 앞으로 수년내  
 에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국제역학적 구조에  
 있어서의 「현상유치」 상태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적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c) 중·소관계

국제권력의 다원적 분배현상은 사실상 공산권에서부터 비  
 롯되었다고 볼수 있다. 스탈린시대 이후로는 이른바 국제공  
 산주의 운동이 모스크바 중심체제로부터 다원화 되어갔다.  
 즉 전후 유럽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수단으로 한 소련의 세  
 력팽창은 민족주의를 능가할것이라는 소련의 예측이 문어진지  
 는 오래다. 그것은 동구뿐 아니라 서구각국의 공산당들의 운동  
 도 유럽국가들이 전후안정기에 들어서자 민족국가이익(Nation-  
 al interests)에 쫓기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중공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

나기 시작한 것도 1950년대 부터였다

1960년대에 와서는 중소국경분쟁에 까지 이르렀으며 아아제

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다

중공은 44에 들어와서도 미국보다도 소련을 집중적으로

공정했다 소위 「부레즈네프 독트린」으로 밝힌 소련의

무력사용 불사론은 그야말로 중공을 자극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편 공산주의자들간에 분쟁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이념분

쟁이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택동 흐르시초프간에 벌

어진 논쟁은 필연적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분쟁요인이 이때

을로기에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중공은 소련은 사회제국주의적 국가로 정의하고 자신을 후진

국들의 대제국주의 투쟁의 통수로 규정짓고 있다 특히 인

족해방운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요컨대 중·소간에는 재결합할수 없는 간격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앞으로 몇 10년 계속될 상태의 정조인 것이다

중공의 배미집근은 소련의 군사적 압력에 대한 역학적 반동

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소련도 역시 인도의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고 소련해군이 인도양에서 행동이 수월하게 되었다

1972년 2월 박승이 중공방문을 마치면 1975년까지는 적어도 수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짙게 될 것이다

즉 미·중공의 접근은 소·중공 대립에 대한 역작용이다

중공은 대미접촉을 통해서 미일안보체제의 약화를 계속 추구하게 될 것이고 전술함바와 같이 미국의 대 중공 군사압력을 줄이도록 추후할 것이다

소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주주정책은 중·소관계의 약화라는 전제하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주에서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지상군 병력을 중·소국경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 ① 베르린 협정의 체결

② 유럽안보회의의 추진

③ 서독과의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들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SALT 회담도 들수 있다

이 같은 소련의 기본적 태도는 부란트의 *ost-politik* 과 부

합되었다 소련은 또한 중공전제책으로서 중공남방지역 국가

들과 가일층 친선협조 및 군사원조 등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1969년 브르즈네프가 제안한 소위 「아세아 집단안보체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이미 불가침상호협조 조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와 같은 범주속에서 소련의 접근에 호응할수 있는 나라들은 ① 인도 ② 버마 ③ 타이 ④ 라오스 ⑤ 싱가포르 및 ⑥ 일본 등이다. 소련은 신문기자를 대만에 파견한일이 있었다고 하여 대만과 소련과의 협력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억측이 있었다. 그러나 「대만」의 방위가 미국관관계되는한 이같은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소련의 대한국태도에 는 변함이 없을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중·소는 북극을 서로 자기쪽으로 볼게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는 당분간 변동이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중·소의 직접충돌은 미·일 양쪽에 이롭기 때문에 서로 피할것이다.

1969년 9월 11일 「코시지」이 초저명장례식에서 돌아가는길에 북경에서 주은래를 만나 중·소 국경회담을 제의 합의한것은 이같은 이유에 기인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요약하면 소련은 중공을 무력충돌이 없는 뜨거워진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1980년대까지의 전망으로서는 중·소 관계는 유한경합속에서 여립과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3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반도정세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2차대전후 국제정치는 구조면에서나 형태면에서나 큰 변혁을 가져왔다. 서방세계와 공산권은 대전후 일년간의 밀월기간을 재못넘긴채 (1945-1946) 양극화 대별 또는 냉전기 (1946-1955)로 들어 갔다. 이 시대에는 냉전속에 열전 (한국전쟁)도 겪어야 했으며 미, 소 양초대국을 제외한 다른 열강국들은 Bloc 속에서 질서를 수립하려고 몸부림 쳤던 시대였다. 그러다가 핵무기와 그 음반수단의 대륙횡단적 장거리화가 이루어 지자 인류는 전면전쟁의 불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미, 소를 제외한, 영, 불, 중공등도 핵무기가 개발됨에 따라 또한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새로운 부흥을 맞게 됨에 따라 점차로 국제정치는 평화공존 (1955-1963)을 모색케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새로운 입장을 건설한 프랑스와 중공은 공히 제3세력권형성을 도모화하였다. 이로부터 국제정치는 이른바 다원주의 정조를 띠었다 (1963년 이래) 그것 이 확실해진것은 미국의 부순독트린이 천명되며, 부티 었다. 이렇듯 부세는 세계사의 금류방향에 추는 함추는 심어하며 「블록」속에서 안정을 추구해오던 밝은 중, 소국가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않을수 없던 엄연한 사실에 직면케 되었다.

우리는 지난간 시대의 문제의 분석보다도 다원화 단계이후의 문

제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보기로 한다 국제권력의 다원화가 이루어  
지가기까지의 계기는 여러사건들로써도 표현될수 있다 즉

① 62년 10월의 쿠바 위기의 수습

② 63년 8월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간에 성립된 부분적핵실험금  
지조약

③ 프랑스와 중공의 독자행동

이로 부터 미, 소간에는 힘조적 기조가 높아져 갔다 한편 북  
핵정부의 개 아세아정책으로 미중공의 접근이 모색되었고 이것은  
중공세력의 사실상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는 드골의 프랑스가  
구수권건설을 특포로한 새동방정책 및 새미국정책 그리고 서독과  
일본의 개강대화 등을 들수있다 셋째로 주목되는 것은 다원화단  
계에 들어우서는 「이에슬로기」의 확실성이 상실되고 민족주의가  
부활됨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대 되어  
은 만큼 국제관계의 전개가 보다 복잡해지고 복수의 진영간 또는  
지역간의 종합적균형유지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70년대도 가일층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따기 25년간 국제전치의 기본 테두리가 되어온 전투체제는 변질되고  
그 대신 세계적규모로 새로운 세력구조와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나  
갈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캐프란」교수는 세계정치체제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 6개 유형을 들었다 ① 정함 적세력 균형체제 ② 해이한 양국  
 화국제정치체제 ③ 견고한 양국 화국제정치체제 ④ 세계정부체제 ⑤ 일제  
 국세계지배체제 ⑥ 만장일치 국제정치체제 등이다 이같은 구분도 재  
 미있는 것이다 현단계를 적용하면 해이한 양국화체제로 부러 경  
 함적 세력균형체제로 이행중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staley roffman*의 구분을 따르면 다음 6개 유형으로 분  
 다 ③ ① 양국화대결체제 ② 양국화공존체제 ③ 다국화대결체제  
 ④ 다국화공존체제 ⑤ 통합대결체제 ⑥ 통합공존체제 등이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④의 다국화공존체제가 강대국세계에서는 성  
 립될 것으로 보이고 약소제국들의 사이에서는 ⑤의 통합대결체제를  
 모면키 어려울 것 같은 2원적 체제의 구성가능성도 엿보인다  
 한편 현개의 추세로 보면 강대국들간에는 *status quo* 라는 건  
 칩이 제일 편리한 것이다 이를 목적으로 미국과 증공은 앞으로  
 수교에 이를 때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 증공  
 의 대립관계는 전술한바 처럼 전면적근수대결직전상태에서 담보할 것  
 같고 미, 증공접근의 여파로 미,일 안보 체제는 점차로 약화될 가능  
 성이 크다 고로 일본은 정전분리정책의 소극적 배일을 벗어나 필  
 전적으로 증공 및 소련과 각각 접근할 것이다 즉 강대국들은 경  
 함적 세력균형국에 들어가게 됨으로 가깝적 극지전쟁에 개입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 갈것이다 따라서 약소국들은 분쟁가능성이

높아져 갈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및 지리적으로 국제중간지  
대의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또 남북분단으로 북괴와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 안전지대화의 길은 험하고 멀다 어느  
일본학자는 한국같은 국제중간지대의 약소국은 세가지의 대외정책  
방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③

첫째는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을 잘 이용해서 자주독립의 지위를 유  
지하는법

둘째는 이들 강국중의 하나나 둘을 보호자로 삼고 지배는 것

셋째는 이들 모든 강국들의 담보아래 영세 중립의 지위를 유지하  
려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첫째 방법과 셋째방법은 지금까지의 현실로 보아 불가능하  
였다 지금까지의 현실은 미국의 보호하에서 북괴를 비롯한 공산권  
의 한국에 대한 야욕을 견제하여 왔는데 현재 미국의 서아시아정  
책과 중공과 일본의 재역활 즉 다원화되어 가는 국제적관계아래에  
서 미국의 보호받을 안일하게 믿고 있을수 없는 객관적조건이 형  
성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강대국들의 정치력을 극소화시키  
고 한국의 정치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근본문제가 될것이다

국제중간지대의 중소국이라 할지라도 국내적 단합도가 높고 국내적  
정치력이 극대화되고 주위접속 강대국들이 예외없이 불가침으로 부

히 공동적이익을 발견케 하는 조건을 창조해내는 것은 앞으로 10  
 년간 특히 변해가는 4강국들의 역학적 상황하에서 바로 한국이  
 꼭 모색해야 될 최소의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즉 북괴의 전쟁도발  
 같은 것이 중공과 소련에게 이익되는 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Europe 근세사에서 서서의 예를 볼수있다 훌륭한 국민총합  
 력과 외교정책에서 그들은 명토의 안전을 사실상 보장받고 있다  
 그들은 19세기 초에 접속 강대국들의 세력권형적 원충지대의 역할  
 을 원심적 강대국들(영, 러시아)과 실리일치점에서 추구하였다 ㉔  
 그런데 최근 우리주변의 정세변화를 보면 중공과 일본의 강대화가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강대국이 2원적 상태로 부러 다원화 되어가고 있고  
 미일핵력체와 공산 B/C으로 맞서게 된다. 그런데 그가운데에서도  
 미, 중공접근과 중, 소관계의 약화는 미일관계를 중화시켜버릴 단계  
 로 접어들게 된다 또한 미국의 대한방위정책도 가변적일 것이다  
 중, 소관계는 대립적이지만 그들의 이태올로기적 팽창정책에는 변동  
 이 없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소련과 중공이 대결하지만  
 대 한반도진출에서는 육인(북괴를) 또는 고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소련과 중공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극동진출에서의 승  
 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세계정세는 양극화 평화공존시대처럼 단순하지 않고 Europe

정세와 중동정세가 다르고 동남아정세가 또 다를수 있는 그야말로  
힘의 분배의 다원화 뿐 아니라 정세도 다양화, 말것이다

즉 한반도정세는 Europe정세와 관계없이 경화될수도 있다는 것  
이다 특히 북괴는 세계 어느 공산국과도 달리 전체주의의 정상을  
이루고 있고 25년간 외부세계와 북괴인민을 완전 단절시킨채 마음대로  
방향을 조작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하에서 한국의 입장은 최대한도의 노력으로 최선의  
입장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정치인, 정부 및 온국민의 과제  
인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안보는 점점더 한국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놓일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강대국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  
므로써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있는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예언하  
는 영역까지 넓혀 보았다 다시말해서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중  
심으로 논하였다 왜냐하면 항상과거의 역사가 그렇듯듯이 역사적  
경험은 장래에도 어느정도 지속될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원래 정치적 세계에는 불확정성이 강하다 터구나  
국제관계와 같은 제국의 행태에는 더욱 그런점이 농후하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논할때 현존하는 실험실로서 역사를 암시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담보」를 갖는 유일의 길이다 이런 뜻에  
서 한마디 마지막 말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19세기적

상황 미래를 암시하는 역사적 상황이 아닌가 한다

(주①) 소련의 중앙 통계국 (MOSCOW) 이 1958년에 각국어로 출판한 숫자로 본 40년간에 걸친 소베트 세력 발전이라는 불어판 *Les progres du pouvoir sovietique Depuis 40 ans En chiffres*

PR. 32에 의하면 1956년의 국민수입은 1913년에 비해볼때 17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국민일인당소득수준은 미, 영, 불, 제국이 1913년에 비하여 1956년에 불과 2배를 넘기질 못하는데 비하여 소련은 13배를 mark 했다고 한다

(주②) U. S 안보이사회에 강입이사국이된 증공은 발언을 통하여 초강대국세력을 비난하였고 특히 「소련」을 사회제국주의국으로 못박으면서 모든 아아제국과의 연합전선을 추구하면서 증공자신의 leadership 가능성을 은근히 노골화 하였다

(주③) 드골정부의 외교 정책 (필자 설명)

2차대전후 식민지들의 「민족주의」 라는 현실을 수락하고 「인지반도」로 부터 필수 아주식민지들의 독립을 부여하고 대중공판계정상회담 현실주의적방향을 외교정책상 실현한것이 드골정부이다

(주④) OST-politik (필자 설명)

부란트정권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독일의 동서분단을 「협상유지」 하려는 현실을 인정 이른바 동방정책을 통하여 차원을 달리한 동서교류를 모색하므로 현실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주⑤) 「평화를 위한 새전략」 1970년 2월 18일 박은 대통령  
 대의회보고서 p29에 보면 박은 대통령이 1969년 4월 10일  
 NATO에서의 연설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 - - - 세계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다룰수 있도록 현실  
 적이어야 하면 여기서 - - - - - 운운하였다.

따라서 박은의 *realistic enough to deal with the world as it is*;  
*flexible enough to explore new channels of constructive coop-*  
*eration* 이라는 표현은 1964년 1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연설한  
 드글 대통령의 언어와 흡사할뿐 아니라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다 즉 - - - - - « la France reconnaît simplement le monde tel  
 qu'il est. Elle pense que, tôt or tard, certains gouvernements  
 qui se réservent encore jugeront bon de suivre seen  
 exemple. » - - - - - (프랑스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승인할 뿐이다  
 (다른 정부들도 조만간 프랑스의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본을  
 따를 것이 틀림없다) ※ 이것은 서구에서 발생한 *realism* 은  
 신대륙이국의 외교정책에 철저히 반영되었음을 증명한다

(주⑥)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69-1970 a report of  
 The Secretary of State*

p 28 핵확산금지조약의 승인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70년 3월



(주①) *ibid.* p 29 부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I am not without the confidence that I had at the beginning, I always realized that our differences were very great, that it was going to take time.

But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owe it to their own people and the people of the world----- to negotiate rather than to confront."

(주②) *current scene* (대륙연황) Vol IX No 6 p 7

1967년 부는 *Foreign Affairs* 지 기고한 *Asia after Vietnam*이란 기고문에서 증공에 대한 편일주의적 태도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되자 12월만에 안보담당보좌관 *Herry Kissinger*에게 증공과의 관계개성책을 연구토록했었다

(주③)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69-1970* p 40 A report of the secretary of state.

(주④) 자유경제 이론가 *Wilhelm Röpke* 교수가 1961년 일본 와세다 대학 초청으로 갔다와서 한 강의증에서 인용

(주⑤) *Kaplan, Norton A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1957. pp 21-53

(주⑥) *Stanley Hoffman Gulliver's Troubles the set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1968

(주 ⑬) 신권 은송 (일본학사원 회원 겸 국제문제연구소 명예소장) '국  
동의 안전과 한국통일' 한국 국가안보회의원 안전보장논총 (제 2집)  
에 수록된 논문 p 295

(주 ⑭) William Martin, Histoire de la Suisse 1959

Lausanne payot

## V 통일을 위한 국내여건의 조성

근본적으로 통일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적 상황과 북괴와의 대립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가지 측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소홀히 하여도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고립화되던가 아니면 한반도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국제정세는 이미 지적인 바와같이 국제체제의 다양화에 따른 현상유지와 더불어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간의 갈등과 긴장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은 국제정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현상유지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음이 틀림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같은 국제정세와는 별도로 북괴의 태도는 계속 공산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력도발을 증가시키는 등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이 국제정세와 북괴의 태도라는 두가지 원인이 상호반작용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인 딜레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여건이 국제적인 확대무드」만을 중요시할때는 대내적인 안보위기가 불가피하며, 대내적인 불안요인, 즉 북괴의 태도만을 중요시할때는 국제적인 고립화에 빠지게 된다는 말하자면 이혼배반적인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두가지의 요인, 즉 긴장완화라는 국제적 요청과 한반도자체내의 불안요인에 동시에 대처해 나감으로서 이를 극복하고 조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제일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조화와 극복의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모색해야 하는가? 우선 일차적으로 문제해결의 관건은 국내적인 역량을 배양하는데있다. 국력이 강화됨으로서 국제정세에 신속성있게 대응할수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자체의 내적인 도전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대응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력이 나약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긴장완화에 호응한다는 것은 오히려 통정의 제물이 될수도 있으며 한반도자체의 현실로 볼때도 지극히 위험하다 아니할수 없다.

이같은 판단은 통일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돼야 할 중요성을 지닌다.

본론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북괴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내적인 붕괴를 노리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이 공산주의이론에 입각한 그네들의 전략적인 개념에 기인하는 것이며 동

시에 북괴 자신의 힘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의 독특한 「레알·폴리틱」을 현실에다 적용하는 일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통일정책이란 우선 일차적으로 남한사회의 자체내적 모순을 이용하여 그리고 이를 전략적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파멸을 노리고 있는 북괴의 음모를 철저하게 분쇄하는데 있는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괴로 하여금 이같은 음모를 포기하게 하여 평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우리들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정책의 전제조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력 즉 단순한 물량면에서의 힘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인 능력까지도 겸비할수 있는 강력한 국력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은 국력의 배양만이 한국의 내적붕괴를 음모하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책들을 분쇄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북한사회의 자유화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괴집단에 대해 무력도발은 중지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임해 오라는 그리고 UN의 전능을 인정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오라는 박대통령의 역사적인 8.15선언은 평화적인 통일에의 접근을 위한 현실적인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박대통령

형은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수 있으며 더 잘살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라고 북괴측에 제안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단파어로 유도했던 것이다 실로 통일에의 접근을 위한 모든 노력은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 나설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노력이야 말로 이른바 긴장완화세의 국제적 조류와도 일치할수 있으며 한반도내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내적여건의 조성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할점은 반공사상의 강화책인 것이다

반공사상의 강화문제는 순공통일을 위해서만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지적했듯이 북괴 대남공작의 초점이 되는 한국사회의 내적 모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인 것이다.

## 1. 반공의식의 문제

개발도상에 있는 비서방국가들 중에 한국의 경우만큼 일반국민들

의 반공의식이 투철한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이와같은 현상은 물론 한국민족 교유의 정신문화적인 전통이 이질적인 공산주의 이론 즉 「맑스」→「레닌」→「스타린」주의로 연결되는 공산주의의 경험적인 모순에 대해 필연적인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북괴가 저지른 6.25동란을 통해 공산독재의 잔인성과 비인도적인 체질에 대해 강력한 중오심을 갖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6.25 동란이 끝난후에도 북괴의 끊임없는 대남공작과 선전공세를 전개해 왔지만 한국사회의 반공질서에는 조금도 중요됨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반공의식이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첫째 모든 역사적인 경험이 그러하듯이 6.25 동란을 통해서 얻은 공산독재에 대한 경험의 경우도 시간적인 제한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우선 역사적인 현실자체가 항상 변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간의 차이로 인한 역사적인 감각의 차이점인 것이다. 이를테면 동란이전에 출생하여 6.25남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몸소 체험했던 세대와 6.25동란이후에 출생하여 북괴남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식하려는 새로운 세대와의 사이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적인 감각이 근본

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대학생세대가 주로 동란이후에 출생했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의 반공의식에 심각한 일면을 지니게 한다.

둘째, 한국인의 반공의식이 2대부분의 경우가 북괴남침이라는 비극을 통해 직접적인 체험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반공의식이 그만큼 투철하다는 좋은 이점이 있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의식의 이론적인 빈곤을 어쩔수 없이 지니게 된다는 또하나의 약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이론적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실제적인데 있는것이 사실이나 이론적인 바탕이 결여된 반공의식이란 자칫하면 특수한 경험과 일치하지 않은 피상적인 현상에 접했을 경우 본래의 신념조차 흔들리게 되는 의외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볼때 우리들은 반공의식의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1) 반공사상의 이론적 뒷받침
- (2) 젊은 세대의 요구와 감각에 맞은 이론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반공교육 그리고, 반공교육담당자에 대한 자질향상의 문제
- (3) 반공이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회정의 구현 우선 반공교육의 이론적 문제는 결국 반공의식이라는 입장



에서 볼때 소극적인 상태로 버려둘수 없다. 그러니까 이같은 요청은 공산주의의 침투여지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하자면 이 사회의 「비전」과 정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이상은 우리들의 국가적인 저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며 반공사상의 장기적인 토착화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허망한 꿈을 능가할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그리고 확신될수 있는 「꿈」을 우리국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

이것이 곧 반공사상의 적극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될수 있으며 이른적인 빈곤을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반공교육도 결국은 적극적인 「비전」과 「꿈」을 현실적으로 안겨줄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국민전체에게 복괴의 실정을 사실그대로 알려주어야 하며 공산주의이론 자체가 너포하고 있는 제반 모순점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산주의는 부정하고 있음을 설득력있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배척하지 않을수 없는 확고한 신념 즉 이상적인 「비전」과 현실사이의 간격을 실천적

으로 극복해 나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더욱 확고하게 자부할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때 우리들의 반공교육은 설득력없는 구호로 전락하기 쉬우며 때에 따라서는 상투적인 선전행위로 오해될수도 있는 중요한 쟁점을 버포하게 된다. 이를테면 반공교육이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설득력 있게 이입되지 않을때 「오히려 북쪽이 더 살기 좋은 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스런 희의로 제기될수 있으며 사회현실에 불만있는 부분이 강력한 저항의식을 제기하는 동시에 출몰한 「루머」를 산출하게 되는 희의의 부작용을 빚게도 된다.

따라서 반공교육의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의 하나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정열적이면서도 솔선수범하는 지도층의 노력과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타 아니할수 없다.

## 2. 사회정의의 문제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공사상의 강화문제가 필수조건이라 전제한바 있다. 그러면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이문제에 관해서는 중서교급을 통래 다양한 형태의 철학적인 개념과 정치적인 이념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정의의식이라는 사회적인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첫째로 국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요청과

둘째로 가시적인 소비질서에 대한 복합적인 감각으로 요약할수

있을것 같다.

여기서 국민들의 생존권문제는 경제체제의 생산능률과 분배의 문제로 해석할수 있으며 가시적인 소비질서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로 해석할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문제는 단순히 빈부의 격차의 극복이라는 소박한 논리적 과제로만 취급할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보장할수 있는가 라는 경제적인 문제와 부가총의 눈에 띄는 사치성을 규제할수 있는 정치사회적인 통제력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현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론문에서는 경제문제와 정치사회적인 일반론을 취급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그러나 원칙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제시할수 있다.

- ①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르는 자본공급의 내외적인 여건문제
- ② 사치풍조의 과감한 통제문제
- ③ 부정부패의 근절문제

④ 사회정의를 「모토」로 하는 정치사회적인 세력규합의 문제 그리고 대국적인 전지에서의 국론통일의 문제.

이상과 같은 문제는 비단 평화적인 통일달성을 위한 국내여건의 조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불안요인의 극복과 정치기능의 강화 문제, 그리고 국민총화의 달성이라는 일반적인 목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해결과제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같은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주도할수 있는 과감하고도 창의적인 우리들의 노력이 되는 것이다. 국론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업이 무력에 의존할수도 없는 것이며 외세에 의한 타율적인 방법에도 의존할수 없다. 그리고 역사적인 필연성에 기대한다거나 일순간에 달성할수 있는 과업도 아닌 한에는 이같은 사회정의를 실현할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만이 유효한 것이며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진지한 접근책이 마련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과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할것은 통일자체에만 급급하기보다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가다듬어 단계적인 접근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자체내의 비약점을 서서히 제거해 나가면서 든든한 내실을 갖추기 위해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통일 의 개념문제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은 통일의 개념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내외여건의 제약성을 고려해 볼때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인 과정을 불가피하게 밟아야 할것 같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지나치게 절박시한 나머지 통일정책까지도 신성시한다면 이는 구체적인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교적인 신축성을 구유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정책배로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을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미 제1공화국의 권력을 통해 명백히 인식할수 있었던 것이며 제2공화국에 있어서도 사회불안의 요인을 가중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현실에서 보아왔던 것이다.

통일에의 성급한 범천이 감상적인 접근태도로 노출됨으로서 사회질서를 흔들리게 한다든가 국책전반을 약화시키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통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역효과 밖에 가져 들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자체가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감안하면서 역사적으로 규정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이같은 개념실천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선결작업이 필요함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 (1) 통일이란 완성된 상태의 특정한 정치상과 내지는 일사불란의 결함만을 뜻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자면 장기적인 과정을 밟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이고도 확실한 접근방법을 서서히 모색해야 한다는 그리고 구체적이고도 실현성있는 정책방향을 국가정책의 기저로 삼아야 한다는 것
- (2) 이상과 같은 통일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수 있는 국민 주도형의 홍보활동이 착실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
- (3) 역사적인 과정으로서의, 혹은 민족적인 과업으로서의 통일개념을 일단 채택한 이후에는 국가정책의 합리적인 조정작업이 따라야 한다는 것

여기서 개념설정의 선결문제와 국민총화의 달성을 위한 홍보활동의 전개문제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줄 안다.

그러나 제3의 과제, 즉 현실적인 제약점을 고려하여 통일정책을 장기적인 작업으로 채택할 경우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국가정책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외교자세를 전환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국내여건의 조성문제는 거의적인 자세와도 분리될수 없으며 이러한 내외정세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 ▽. 결 론

우록 정책이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이상의 상호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정책은 미래에 대한 가정과 이에 따르는 모험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에 정책은 항상 실패할 가능성까지 내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실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단순한 대답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통제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이른바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이상간의 간격만큼은 좁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권좌의 후차와의 「황금의 준령」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지도자로서의 지혜와 명도력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때 과거 대한민국적 통일정책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한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당위론에 치중된 나머지 스스로가 관념이나 정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특히 통일을 하나의 상례로만 인식하고 그 과정의 문제를 소홀히 한데서 나온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의 비현실적인 통일관을 탈피하여 보다 역사적인 안목에서 통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정의한 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박머동렬의 1970년 8.15선언이었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8.15선언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켜 주었으며 이에 대한 민족의 결의를 단적으로 표현하여 준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와 같은 통일에의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구현하는가 라는 구체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냉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만 할 현실적인 여건이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과 한반도 내적인 정세를 말한다. 그리고 한반도 내적인 정세라 함은 북괴의 이른바 「남조선 해방」 정책과 한국사회의 내적여건을 의미한다.

본론은 이미 이상과 같은 내적여건에 대해 언급했으며 아울러 이에 필요한 국내여건의 조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도 제시한바 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부가할 점은 한반도의 통일을 하나의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 정의했을 때 필요한 대외정책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외 환경의 추세는 국제체제의 다원화, 동맹체제의 약화,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의 성립, 그리고 유한경쟁적 상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현상유지 및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강대국간의 세력균형관계는 일면 강대국간의 경쟁과정에 제약을 줌으로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면에 있어서는 「블락」 체제의 해소로 인하여 강대국이 중소국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견제능력이란 양극화체제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된다는 점이다. 중소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대국의 능력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중소국가간의 충돌의 빈도는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가, 북극의 전쟁도발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의 능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제체제의 다원화로 인하여 자칫하면 강대국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약소국가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유럽외교사의 교훈이며

한국 근대사의 뼈저린 체험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과 소련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과연 어느선까지 갈 용의가  
있는 것인가? 또한 일본과 중공의 균형은 한반도에 대하여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외교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의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때 이에 대한 우  
리의 대비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한국의 안보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과 현상유  
지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안  
보외교의 초점은 한미관계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강대국  
가운데 아세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과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국  
가는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국은 한미관계를 전제로 외교의 다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한미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다범외  
교를 서둘러 기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며 또한 그렇다고 하여 한미관계에만 집착하여 그 이상의  
외교노력을 아낀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외교의 다원화의 필요성은 국제관계의 체제적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에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

다.

세째로 통일의 개념을 역사적 차원에서 정의한다면 적어도 종래의 「UN」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비단 「유엔」이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국제 정치의 현실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유엔」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나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의 딜레마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이다.

네째로 통일은 결국 한반도적 과제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한반도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적은 사실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며 통일 자체를 외적 환경에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인 남북접촉의 시도는 중장기적인 전지에서 본다면 가장 현실적인 통일에의 접근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단계적인 남북접촉은 이미 본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국내여건의 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타이밍」이라 함은 통일정책의 행정적 실행과정이 있어서 국제정세의 구체적인 진전과 국내여건조성의 단계, 그리고 남북접촉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동시에 조화시켜 나

가는가 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타임·테이블」을 예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적 신축성을 희생시킬 우려조차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잠정적인 구상으로서 대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 년 도           | 국제정세   | 국내여건                                       | 통일정책   |
|---------------|--|--|--|
| 1971-<br>1973 | ① 미·중공 접근<br>② 중·소관계악화<br>③ 미·일간의 협력과 경쟁<br>④ 미·소 협상유지         | ① 안보체제 강화<br>② 반공사상 강화<br>③ 사회정의 지향        | ① UN 외교지양<br>② 대미외교 강화<br>③ 남·북 인도적 접촉 시도<br>④ 통일개념의 재정비 |
| 1973~<br>1976 | ① 미·중공국고정상화<br>② 미·소간의 협력과 경쟁<br>③ 미·일관계 협력과 경쟁<br>④ 중·소관계악화확대 | ① 반공사상 강화<br>② 사회정의 구현<br>③ 경제성장<br>④ 자주국방 | ① 남·북 인도적 접촉 본격화<br>② 다변외교 시도<br>③ 통일개념의 확립              |

| 년 도           | 국제 정세  | 국내 여건  | 통일 정책   |
|---------------|--|--|---|
| 1977-<br>1980 | ① 핵보유국간의<br>세력균형 체제<br><br>② 공업생산력을 기<br>초로 하는 국제정치<br>구조<br><br>③ 이념적 요소의<br>가능해소 | ① 복지 국가 지향<br><br>② 공업경제 기초 확<br>립<br><br>④ 소비경제와 사회<br>정의를 바탕으로<br>하는 반공사상 확<br>립 | ① 북한 자유화 시도<br><br>② 북방정책 실현<br><br>③ 남·북 접촉 확대 |

이상의 「타임·레이블」은 물론 통일의 실현을 보장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이와 같은 계획을 어떠한 절세 하에서도 추진해야 한다는, 그리고 반드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리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이상의 적응과정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레이블」은 결국 상대적이며 잠정적인 것이다.

다만 통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중장기적으로 구상해 볼 때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하나의 특정한 방안을 제시했을 따름이다.

